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56-01

2023년도 인권강사 양성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현황 실태조사

DFINE
(주)디파인앤코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현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주)디파인앰코
대표이사 이영철

유의사항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도표·그래프·교차분석표 내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수행 체계	2
3. 연구 수행 방법	3
1) 데스크 리서치	3
2) 사전 인터뷰	4
3) 온라인 조사	5
4) 심층 인터뷰	7
II. 주요 조사 결과	
Part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활동 기관 현황	8
1. <인권> 관련 강사 활동 지원 기관 현황	9
1) 유형별 기관 현황	9
2. <인권> 관련 자격증 현황	10
1) 자격증 발급 및 운영 현황	10
2)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등록 자격증	10
Part 2.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실태	11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현황	12
1) 양성과정 운영 여부	12
2) 양성과정 운영방식	13
3) 양성과정 운영비용	14
4) 연간 운영 횟수	14

5) 양성과정 운영 형태	15
2.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모집 내용	16
1) 양성과정의 명칭	16
2) 양성과정 모집 분야	17
3) 모집 대상자	18
4) 홍보 채널 및 내용	19
5) 교육 비용	19
3.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내용	20
1) 교육 시간	20
2) 교육 내용	21
3) 강사진 운영	22
4) 수료증 발급 기준	22
5) 발급 서류	23
4.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인원	24
1) 등록 인원	24
2) 수료 인원	24
3) 강사 활동 인원	25
5. 양성과정 운영 관련 니즈	26
1) 양성과정 운영 시 어려운 점	26
2) 양성과정 운영 중단 및 미운영 이유	28

II. 주요 조사 결과

Part 3. 민간분야 인권강사 활동 실태	30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소속기관 특성	31
1) 소속 인권강사 수	31
2) 인권강사 소속 형태	32
3) 강사 파견 여부	33
4) 파견 시 강의 배정 방법	34
2. 민간분야 인권강사 강의 활동 현황	35

1) 강의 대상자 및 기관	35
2) 강의 내용	37
3) 강의 시간	38
4) 강의 빈도 및 연간 강의 횟수	40
3. 민간분야 인권 강의 비용	42
1) 강의료 지급기준	42
2) 1회 강의료	42
3) 강의료 지급 방법	43
4) 적정 강의료	43
5) 강의료 협의 시 어려운점	44
4. 민간분야 인권강사 소속 및 활동 형태	45
1) 타 기관 중복 활동 여부	45
2)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경험 및 지원하지 않는 이유	46
3) 인권강사 전업 비중 및 겸업 이유	47
5. 민간분야 인권강사 소속기관의 활동 지원	48
1) 심화교육 진행 방식	48
2) 심화교육 내용	49
3) 소통 공간 운영방식	50
4) 소통 공간 활용 방식	51
5) 인권강사 활동 및 지원 시 어려운 점	52
6.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54
1)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54
2) 국가인권위원회 기대점 및 건의사항	56

II. 주요 조사 결과

Part 4. 민간분야 인권교육 시장 동향	58
1. 인권교육 수요 증감	59
2. 인권강의 요청 분야	60
3. 인권강의 진행 형태	61

4. 인권교육 Trend 변화	62
Ⅲ. 요약 및 결론	63
IV. 부록	71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 조사] 연구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권강사 위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도 인권관련 협회, 자격증 발급 기관 등이 성장하고 있음.
- ▶ 이에 민간분야의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협회와 단체의 니즈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권강의 품질 향상과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는 민간분야의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인권교육 시장 전반적인 동향 점검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심층적인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자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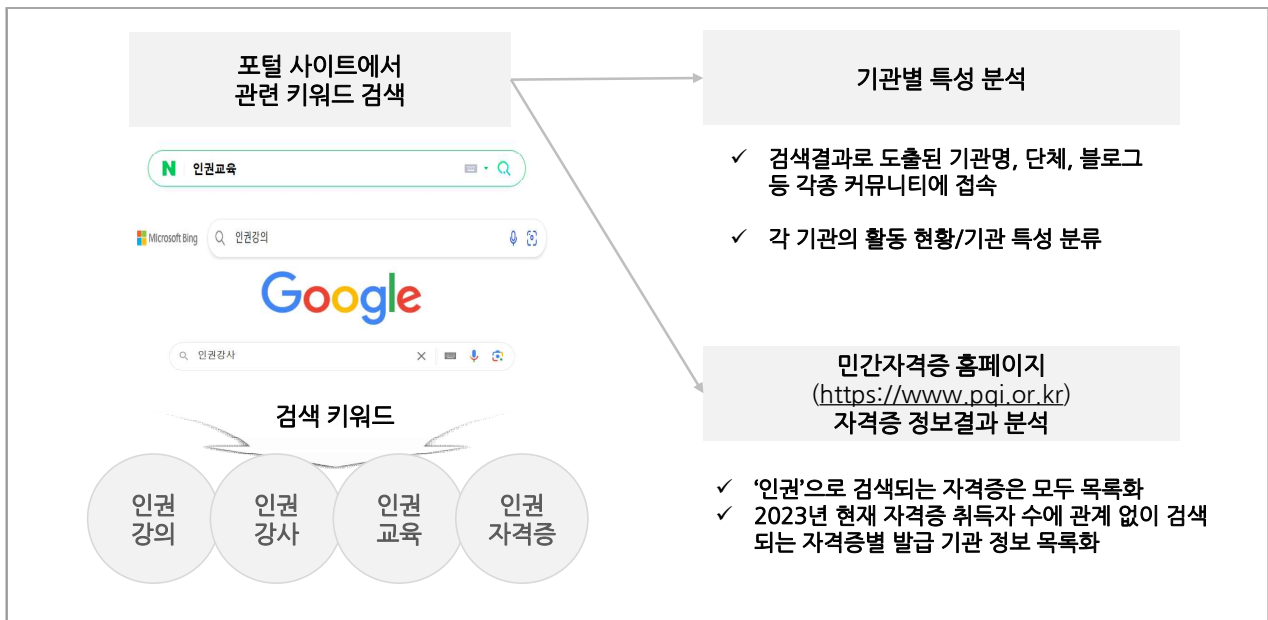
수행 단계	수행 방법	수행 내용 및 목적
Phase 1.	데스크 리서치	온/오프라인 상의 정보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 - 정량조사 대상 기관 목록 작성 - 정량조사 설문지 작성, 결과 분석에 활용 - 기존 연구 결과와의 연계성을 통한 입체적인 분석
	사전 인터뷰	일대일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 사전에 인권교육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 실태 조사의 진행 방안에 대한 자문
Phase 2.	정량조사	1차 사전조사 전화/이메일 조사 -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수집된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기관의 담당자 파악
		2차 본조사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실태 파악
Phase 3.	정성조사	일대일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현황 파악 -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니즈 파악

3. 연구 수행 방법

1) 데스크 리서치

온/오프라인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각종 공공 및 민간단체/협회(이하 기관)를 목록화하고 기관별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함.

- ① 온라인 조사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인권강의', '인권강사', '인권교육', '인권자격증'을 키워드로 온라인에서 수집된 모든 결과를 수집 후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특성을 분석.
 또한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인권' 명칭으로 등록된 자격증 목록화.



- ②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문헌 수집

조사대상	인권교육 시장 동향 및 기관 현황 파악을 위한 관련 연구 자료
조사과정	Step 0. 자료 수집 범위 설정 → Step 1. 데이터 수집 → Step 2. 데이터 정리/비교 → Step 3.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
조사방법	- 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자료 검색 - 공공기관/관련 기관의 공개자료 등 검토 - 자격증 발급기관의 공시자료 등 분석

2) 사전 인터뷰

① 조사 설계

본 조사 진행에 앞서 인권교육 시장 전반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인권교육 시장의 현황 파악 및 향후 온라인 조사 진행 방향을 사전에 점검함.

조사대상	민간분야(협회, 단체)에 소속되어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
표본크기	2명
표본구성	- 인권강사 활동 5년 이상인 강사 - 인권강사 양성과정이 활발한 단체의 영향력이 높은 강사 우선 섭외
조사방법	일대일 심층 면접 조사(In-depth Interview) - 인터뷰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조사기간	2023년 7월 12일(수) ~ 7월 13일(목) 총 2일간

3) 온라인 조사

① 조사 설계

- 사전 조사 :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파악된 민간분야의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기관 118곳 전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발송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진행.
- 본 조사 : 사전 조사에서 확정된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설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37곳의 기관에서 응답 완료(응답률 50.0%).

조사 대상	민간분야에서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중인 기관 - 설문응답이 가능한 기관의 운영 담당자 또는 소속 인권 강사
표본크기 (응답자수)	전국 37개 기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문자 발송을 통한 온라인 조사(Online-Survey)
조사 기간	2023년 9월 15일(금) ~ 10월 12일(목) 총 4주

② 자료 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 22.0에 의해 분석됨

③ 응답 기관 특성

구분		응답기관수(개)	비율(%)
전체		(37)	100.0
운영 기간	5년 미만	(6)	16.2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32.4
	10년 이상	(19)	51.4
소속 강사 수	10명 미만	(12)	32.4
	10명 이상 ~ 20명 미만	(9)	24.3
	20명 이상 ~ 50명 미만	(4)	10.8
	50명 이상 ~ 70명 미만	(3)	8.1
	70명 이상 ~ 100명 미만	(3)	8.1
	100명 이상	(6)	16.2
양성과정 운영 여부	현재 운영함	(17)	45.9
	예전에는 운영하였으나 현재 미운영	(12)	32.4
	운영한 적 없음	(8)	21.6
기관 내 발급 서류	수료증	(22)	59.5
	자격증	(7)	18.9
	위촉장	(4)	10.8
	인권교육 확인증	(11)	29.7
	국가등록 민간자격	(6)	16.2
	발급서류 없음	(5)	13.5
인권강사 파견 여부	소속강사 파견함	(30)	81.1
	소속강사 파견하지 않음	(4)	10.8
	소속강사는 파견하지 않고 기관장이 강의	(3)	8.1

4) 심층 인터뷰

① 조사 설계

- 온라인 조사 응답 기관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에 대한 니즈 파악을 위해 일대일 심층 면접조사 진행

조사 대상	민간분야에서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중인 기관 - 인터뷰 응답이 가능한 기관의 운영 담당자 또는 소속 인권 강사
표본크기	전국 18개 기관
조사 방법	일대일 심층 면접 조사(In-depth Interview) - 인터뷰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대면/전화/ZOOM회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진행
조사 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 총 6일간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 조사] 연구

II. 주요 조사 결과

Part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기관 현황

1. <인권> 관련 강사 활동 지원 기관 현황

- ▶ 본 연구는 <인권>과 관련하여 이뤄지고 있는 인권 강사 양성과정, 수료증, 자격증, 인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운영 명칭상 <인권>이 포함된 경우만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 포털 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인권> 키워드가 포함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분야별 명칭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예: 청소년노동네트워크, 청소년 감수성,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은 제외).

1) 유형별 기관 현황

- ▶ <인권> 관련 강사 활동 지원 기관 중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총 30개 기관이며,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인권교육 현장에 강사를 파견하지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88개 기관으로 파악됨.(단, 양성 과정 운영 여부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분류에 반영되었음)



***강사 양성 과정 정의**

- 인권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해당 기관 설립일로부터 한번이라도 양성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포함)
- 포털 사이트 및 각 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공지 사항에 '인권강사 과정' 모집 공고 있는 기관

***자격증**

- 민간자격사이트(<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내에 '인권' 명칭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해당 기관이 폐업된 경우도 포함되었음)

***인권교육 현장 강사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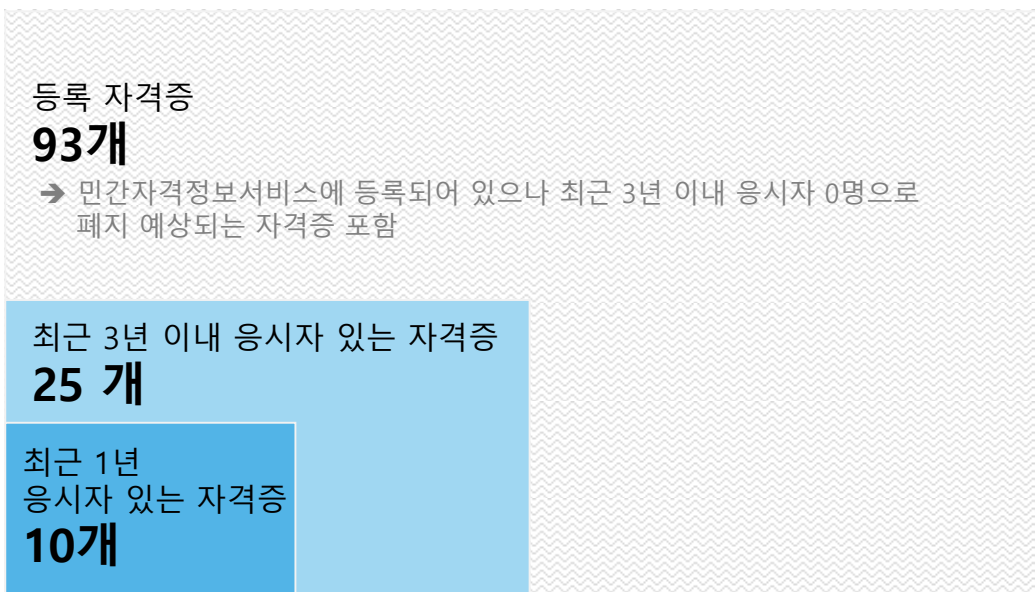
- 일반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등 인권교육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인권강사를 파견한 기관

2. <인권> 관련 자격증 현황

1) 자격증 발급 및 운영 현황

- ▶ <인권 강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으며,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으로 발급되고 있음.
- ▶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인권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관련 자격증은 모두 93개이며, 이중 22년 12월 기준 응시자가 있고 실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격증은 10개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 자격증 현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인권' 키워드로 검색되는 자격증만 포함하였으며, 관련 분야 명칭으로 운영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

2)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등록 자격증

- ▶ 기관별로 한 개 자격증을 발급 관리/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한 기관에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발급 관리/운영하기도 함. 발급기관이 다르지만 자격증 명칭이 동일한 사례도 종종 있음.
(예: 인권교육 전문가, 인권교육 강사)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 조사] 연구

II.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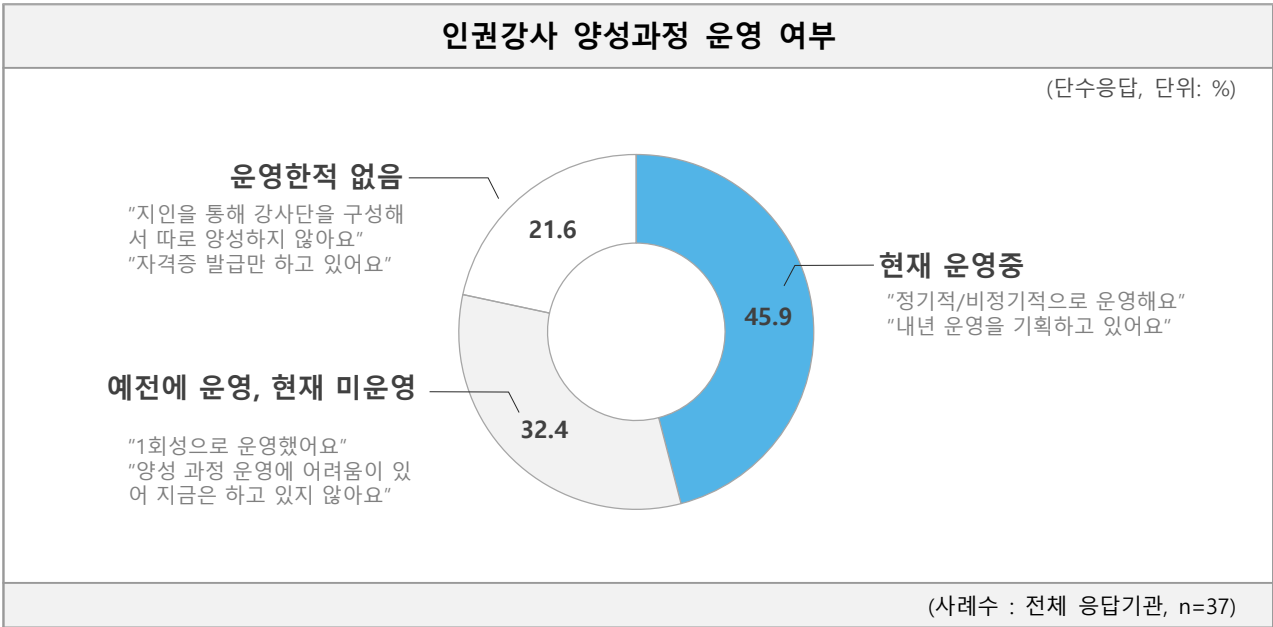
Part 2.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실태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현황

1) 양성과정 운영 여부

[온라인 조사 결과]

- ▶ 37개 응답기관 중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경우는 21.6%.
- ▶ 나머지 78.4%는 양성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그 중 45.9%는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2) 양성과정 운영방식

[심층 인터뷰 결과]

▶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운영방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기관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나뉨.

- 18개 인터뷰 기관 중 양성과정 운영기관 11개 (미운영 7개)

- 11개 운영기관 중 연 1~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4개 (비정기적 7개)

▶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은 ①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과정 중 요청/계약 발생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예시) 아동인권관련 자격증-아동친화 도시¹⁾ 사업 등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 개설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기관의 운영 상황이나 인권강사 총원계획 등 내부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등임.

예시) 양성된 강사의 교육활동 연계와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추후 다시 운영, 기관 내 인권강사의 총원이 필요하여 양성과정 진행 등

▶ 그 외에 기관 내에서도 지부별로 양성과정 운영방식이 다르기도 함.

예시) 본부는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나 지부는 자체적으로 운영 및 인권강사 풀로 활용

“사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강사양성과정을 문의하시는 경우 지자체에 가서 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강사양성과정을 하고 올해는 강사분들을 알리기 위한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엔 다시 강사양성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늘어나는데 수업을 나가실 분이 없어서 작년에 양성과정을 한 번 더 진행했었어요.”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2023년 3월 기준 83개 지방자치단체 인증, 유니세프 홈페이지 발췌)

3) 양성과정 운영비용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인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어 교육 비용 무료.
- ▶ 반면,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과정의 경우 수강자에게 교육비용을 받아 운영(20만 원~50만 원).

“저희 기관 특성상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강사 양성의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받아 진행하는 것이라서 무료예요.”

4) 연간 운영 횟수

[심층 인터뷰 결과]

- ▶ 정기적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연 1~2회 양성과정 진행.
 - 인권교육 중심의 전문기관
예시)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월별/전문분야별 진행, 전문 분야에 대해 연 1회 진행,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진행
 - 인권교육을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기관
예시) 최소인원 신청 시 강의 개설
- ▶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진행한 적 있음.
 - 2023년도에 양성과정 미운영 기관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추가 양성 의뢰가 없거나, 양성된 강사의 강의 활동 연계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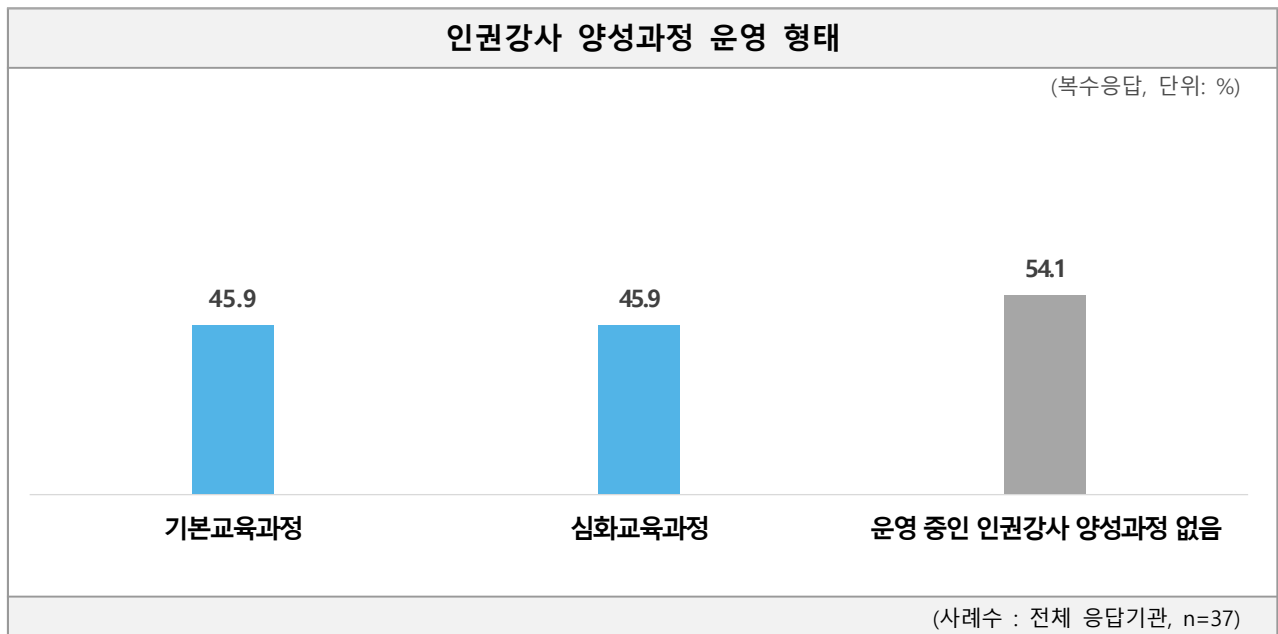
“1년 과정을 월별로 올려놓으면 스케줄을 보시고 신청하세요.”

“매년 한 번 진행하고, 이후에는 보수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5) 양성과정 운영 형태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기관 모두 기본교육과정(기초교육)과 심화교육과정(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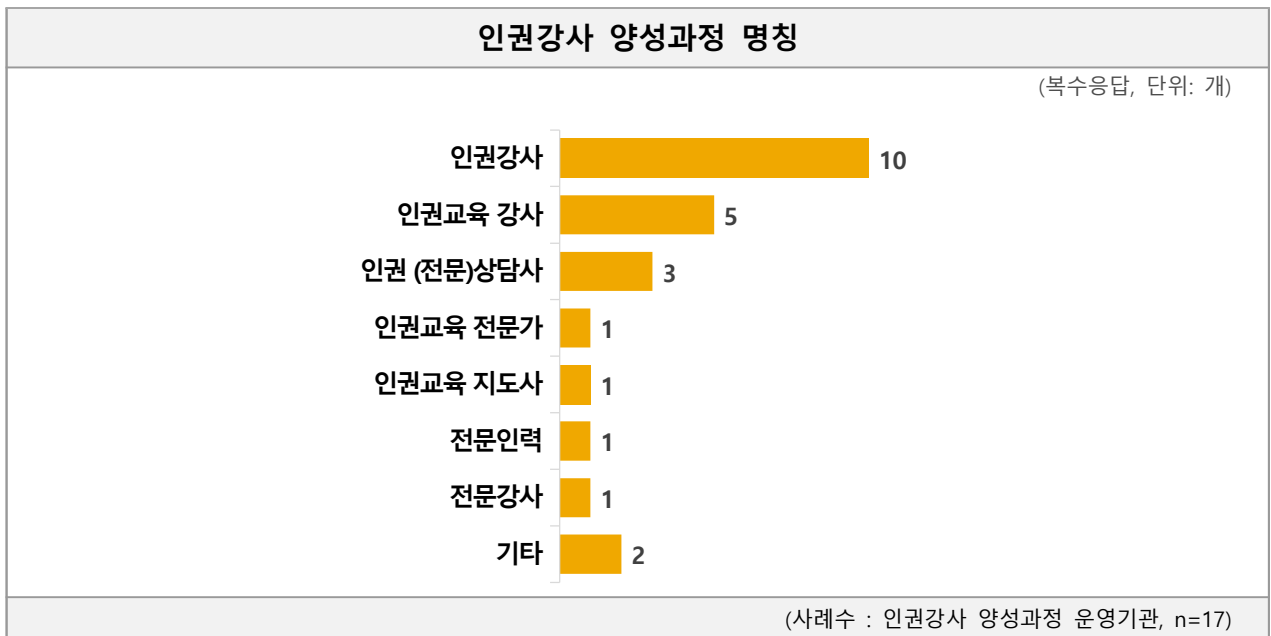


2.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모집 내용

1) 양성과정의 명칭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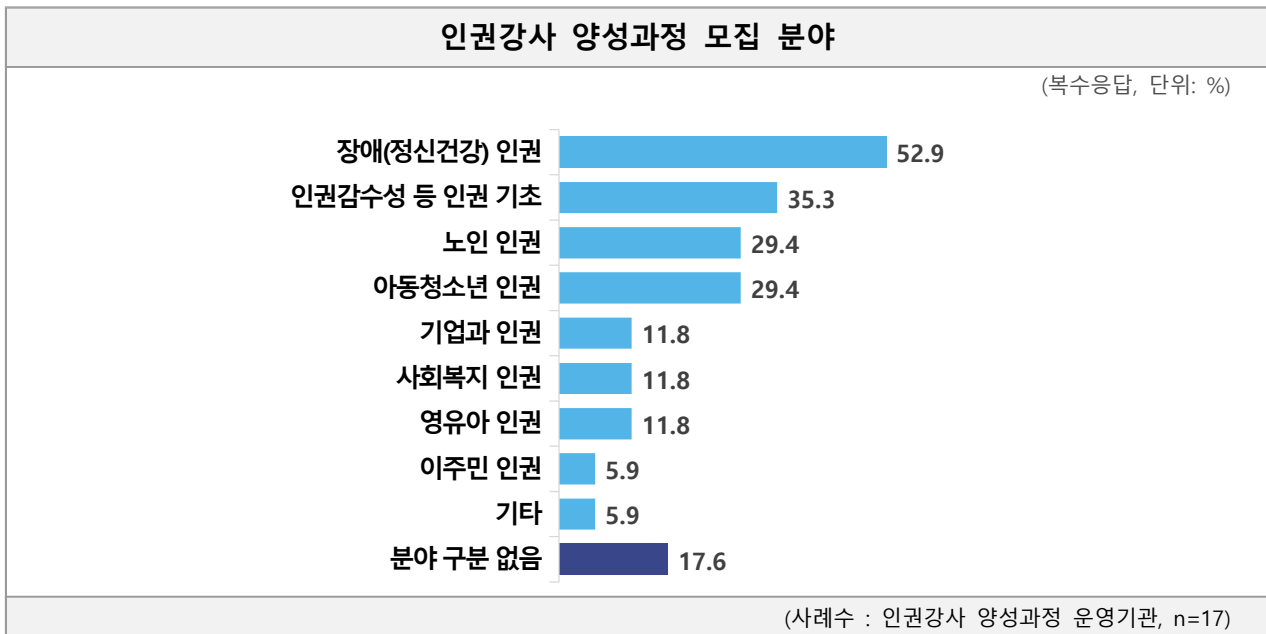
- ▶ 24개의 응답된 인권강사 양성과정 명칭을 분석한 결과, '인권강사', '인권교육 강사' 등 '강사'가 주요 키워드임.
- ▶ 그 외에 인권교육 '전문가', 인권교육 '지도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2) 양성과정 모집 분야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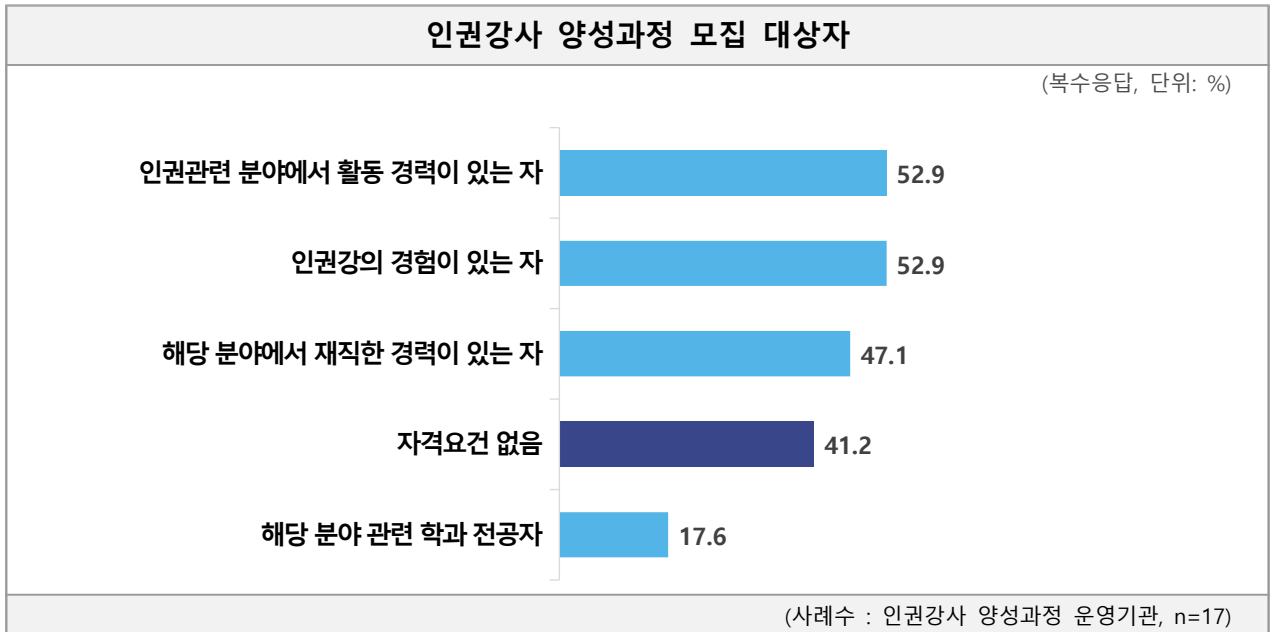
- ▶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모집 분야는 장애(정신건강) 인권이 52.9%로 가장 높고, 인권 기초 35.3%, 노인인권과 아동청소년인권이 각각 29.4% 순임.
- ▶ 그 외에 분야의 구분 없이 모집하는 경우도 17.6%로 나타남.



3) 모집 대상자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 모집 시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인권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과 '인권강의 경험', 그 외에 '해당 분야의 재직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함.
- ▶ 반면, 자격요건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41.2% 임.



[심층 인터뷰 결과]

- ▶ 양성과정 모집 기준은 기관별로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양하며, 난이도에 따라 강사 우수성이나 전문성의 차이를 보임.
- ▶ ① 수료 후 인권강사 활동을 전제로 모집하는 경우
 - 강의 역량 : 교육 관련 경력, 강의 활동 경험 등
- ▶ ②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하여 강사자질을 높이는 경우
 - 전문성, 경력사항, 태도 : 관련학 전공, 강의 경험, 실무 경험, 공공기관의 수료증, 에세이 등
- ▶ ③ 양성과정 대상자가 한정된 경우
 - 장애인 대상, 지역 거주 경력 여성 대상 등
- ▶ ④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이 일반 시민 모집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위탁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강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로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저희는 경력보다 어떤 인권 관점을 갖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에세이와 인권도서과제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4) 홍보 채널 및 내용

[심층 인터뷰 결과]

▶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홍보는 공통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인스타그램/밴드/카카오톡 채널 등의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이루어짐.

- 그 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유관 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신문 보도자료 등으로 홍보

- 지역 특성에 따라 현수막, 모집 대상자에 따라 맘카페를 활용하기도 함

▶ 수료 후 인권강사 활동으로 연계가 가능한 점을 중심으로 홍보.

- 그 외 강의 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심화교육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홈페이지 공고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신문 보도자료를 내기도 해요."

"카카오톡 채널의 플러스 친구로 구독하고 있는 분들에게 알리기도 해요."

"이후 역량에 따라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었어요."

5) 교육 비용

[심층 인터뷰 결과]

▶ 별도의 예산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며, 교육 비용은 20~50만 원으로 가격의 편차가 큼.

- 동일한 3개월(50시간) 교육 과정이라도 20만 원과 45만 원으로 차이를 보임

- 개별 강의 프로그램 당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함

"보통 3개월 과정이면 한 50만 원 정도는 받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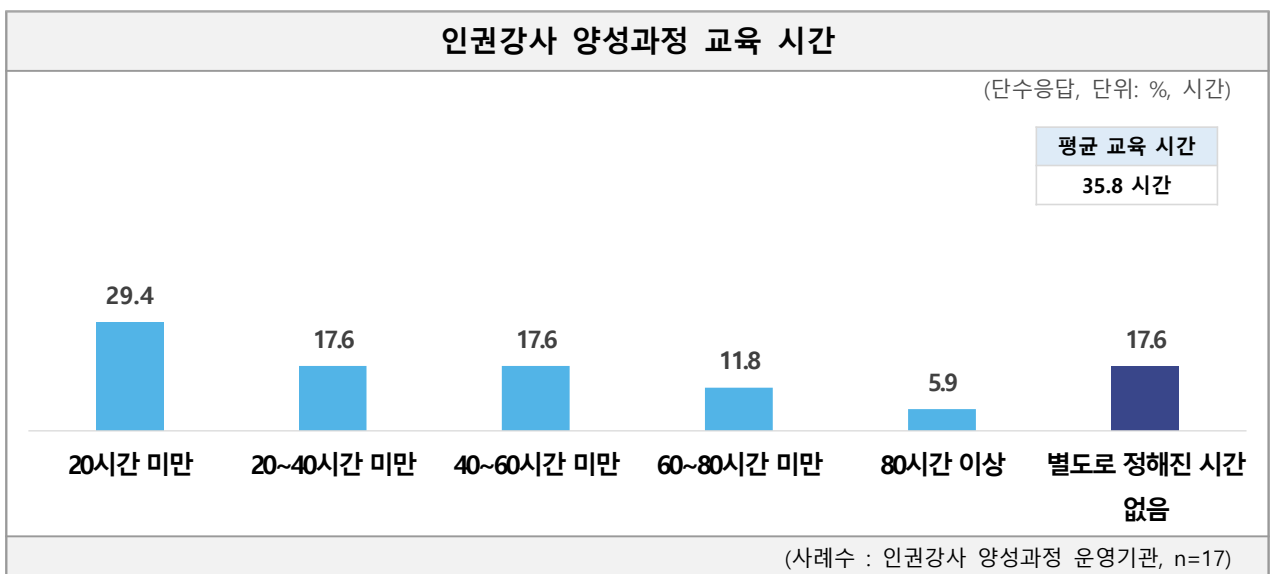
"강사들 드릴 강의료는 드려야 해서 소정의 비용은 있어요."

3.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내용

1) 교육 시간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교육 시간은 평균 35.8시간으로 최저 10시간부터 최고 100시간으로 편차가 큰 편.
- ▶ 20시간 미만 교육이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17.6%를 차지함.



[심층 인터뷰 결과]

- ▶ 양성과정 이수 시간이 가장 긴 경우는 100시간, 주 1회(12주) 혹은 주 2회(5~6주) 수업과 현장 체험, 워크숍, 시연, 심사 등으로 3~6개월 과정.
- ▶ 그 외 50시간, 단계별 30시간, 24시간, 20시간, 프로그램별 16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예시) 단계별 30시간(3단계로 운영), 24시간(매주 2시간씩 12주 과정), 20시간(2시간씩 10회 수업), 프로그램별 16시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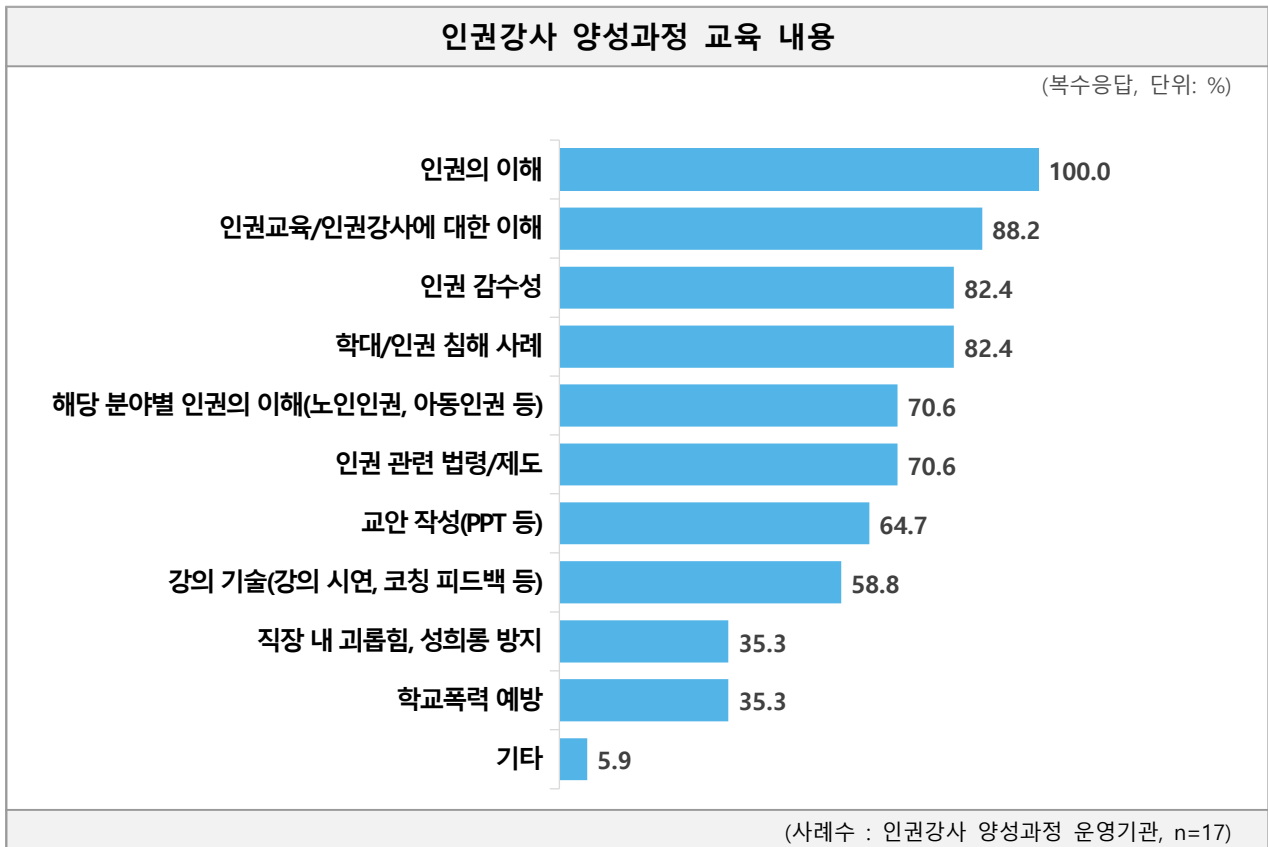
“교육은 5~6주에 나눠서 진행했고 100시간 교육이었습니다.”

“50시간이면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최소 3시간~6시간 정도 합니다.”

2) 교육 내용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 중 '인권의 이해'는 모든 기관에서 실시되는 필수 과목.
- ▶ 그다음으로 인권교육/인권강사에 대한 이해, 인권 감수성 등의 기본 교육과 학대/인권 침해 사례 중심의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 ▶ 교안 작성이나 강의 기술 등 강의스킬 교육은 기본교육과정에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3) 강사진 운영

[심층 인터뷰 결과]

- ▶ 기관 내부의 인권강사가 양성과정의 강사진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교육 내용이나 인력 상황에 따라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
 - 분야별 전문가 초빙(교수, 중앙정부 담당관, 작가, 변호사 등)
 - 양성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수탁기관의 강사진으로 운영
 - 장애인 대상 양성과정의 경우 강사진도 장애인 강사를 우선 초빙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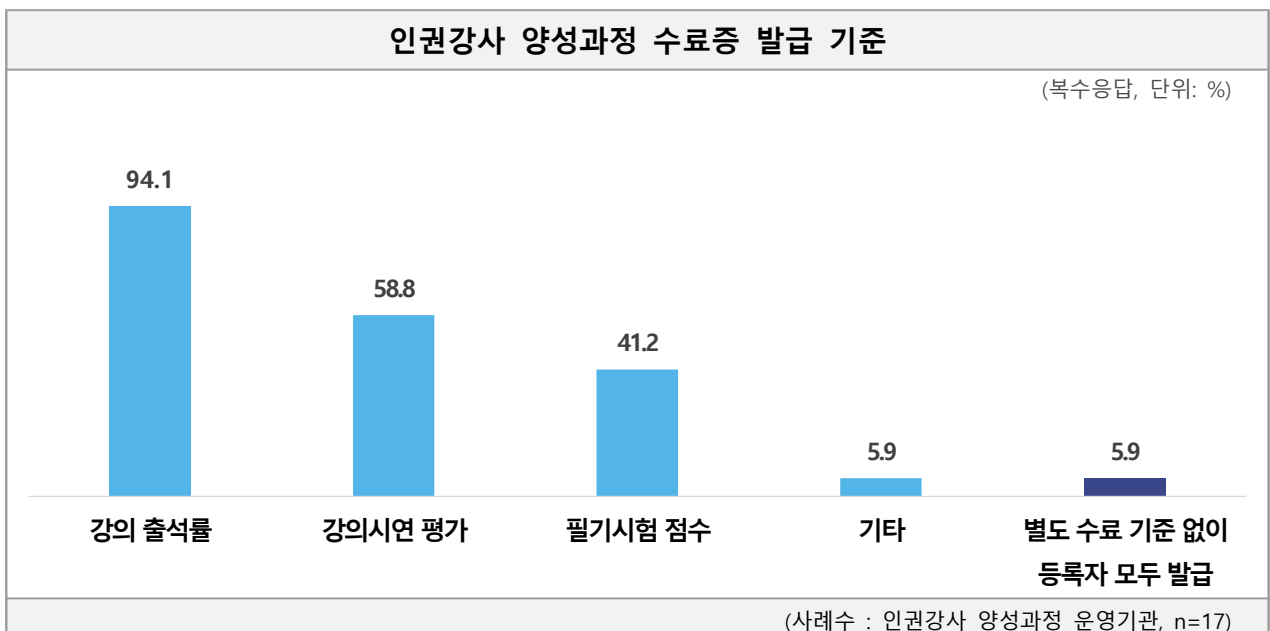
“저희가 양성과정을 개발한 것은 아니고 외부 기관의 교육과정을 선정을 해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접 양성과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양성과정 운영을 요청하면 함께 기획하고 강사진을 보내드립니다.”

4) 수수료 발급 기준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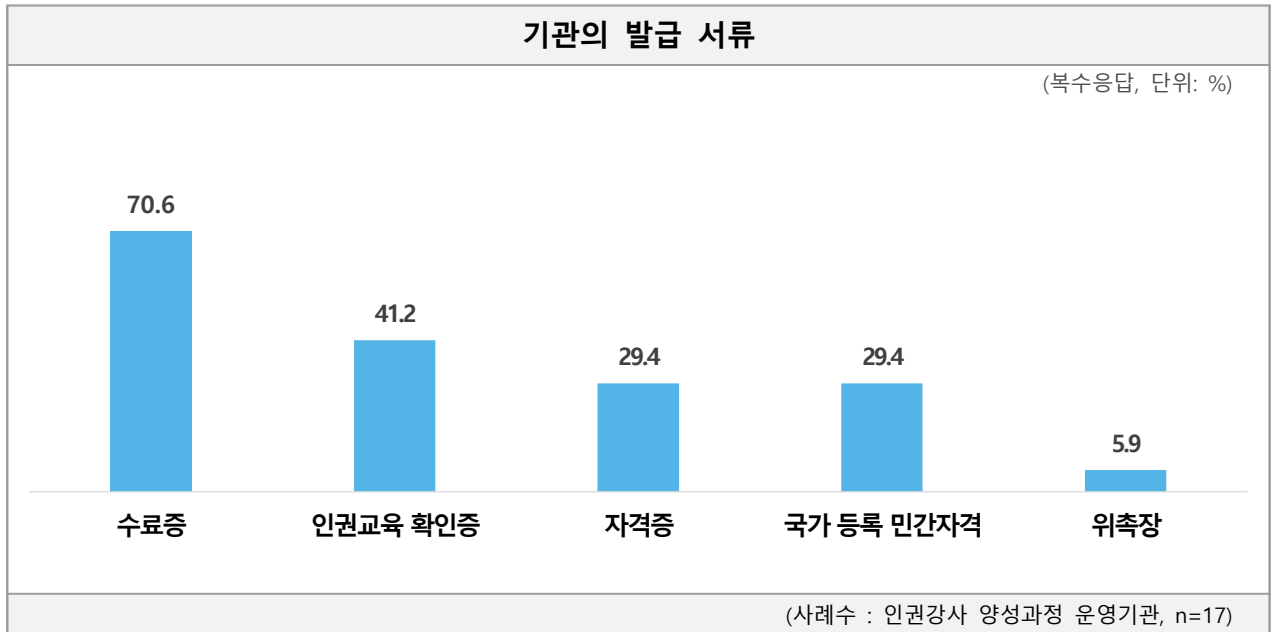
- ▶ ‘강의 출석률’은 가장 기본적인 양성과정 수수료 기준, 그 외에 강의 시연(58.8%)이나 필기시험(41.2%) 등의 방식으로 평가하기도 함.
- ▶ 별도 수수료 기준 없이 등록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발급하는 경우는 5.9%로 낮음.



5) 발급 서류

[온라인 조사 결과]

- ▶ 현재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수료(70.6%).
- ▶ 다음으로 인권교육 확인증(41.2%), 자격증과 국가등록 민간자격이 각각 29.4%.



[심층 인터뷰 결과]

- ▶ 기관 내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상에 따라 다음으로 구분됨.
 - ① 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자격증, 민간 자격증, 위촉장
 - ② 인권교육 요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확인증 등
- ▶ 일부 기관에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하여 자격증만 공급하기도 함.
 - 커리큘럼 협의 후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자격증 공급

“교육과정 후에 수수료,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의무교육기관들은 교육받으신 다음에 확인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하시면 기관으로 보내드립니다.”

4.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인원

1) 등록 인원

[심층 인터뷰 결과]

▶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1회 등록 인원은 10명 내외의 소규모나 20~30명 위주로 운영됨.

- 위탁기관과 협의 시 교육하기 적절한 인원(20~30명)으로 모집을 요청
- 장애인 대상 수업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하기도 함

"정확하게 정해놓지는 않지만 20~30명 사이인 것 같아요. 대규모는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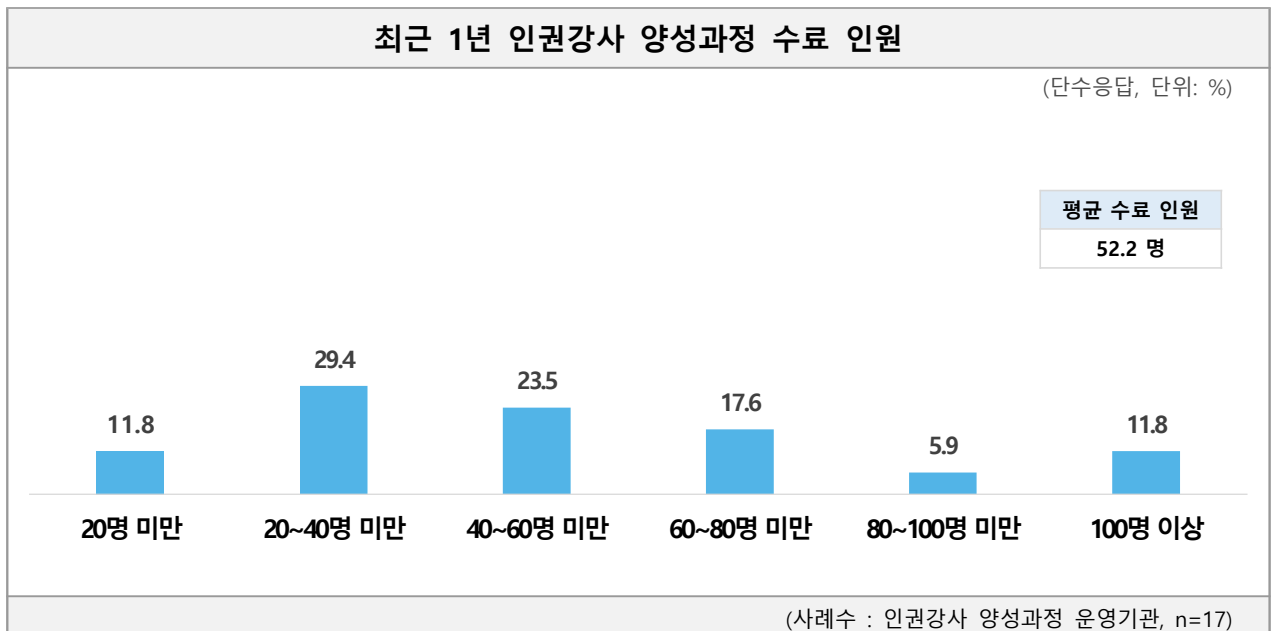
"10명을 넘지 않도록 해서 수강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도록 해요."

2) 수료 인원

[온라인 조사 결과]

▶ 최근 1년간 양성과정을 수료한 누적 인원을 살펴보면 기관당 평균 52.2명으로 20~40명 미만이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다음으로 40~60명 미만이 23.5%, 60~80명 이상 17.6% 등의 순임.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록자의 수료율은 높은 경우 60~80%, 낮은 경우 30% 수준으로 차이를 보임.
- ▶ 대부분 현업이 따로 있어 시간을 내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 기간이 길거나 교육 과정이 어려운 경우 수료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현업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시간을 내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출석률을 못 채우기도 하시고 심사가 엄격한 편이라 떨어지기도 하세요.”

3) 강사 활동 인원

[심층 인터뷰 결과]

- ▶ 양성과정 수료자를 위촉하여 강의 활동을 연계하는 경우 수료자 모두 강사로 활동 가능.
 - 양성과정 수료 시 카카오톡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 공유
 - 양성과정 수료자를 강사로 위촉하고 인권교육 진행 등
- ▶ 강사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화과정 참여가 필수인 경우 기관 내 활동 강사로 남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20~30%).
 - 기본교육은 문턱을 낮추되 강사활동 연계를 위한 보수과정 별도 실시
 - 기본교육 후 실제 강사활동 의향이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 ▶ 일부 1년 단위 사업으로 양성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후 강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양성과정 수료자를 위촉해서 강의를 배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이해하는 기본과정 다음에 강사로 활동할 때 필요한 교수법이나 교안을 작성해 보는 보수과정을 따로 거쳐요.”

“전체 이수자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려고 추가 교육을 받은 분은 몇 분 안돼요.”

5. 양성과정 운영 관련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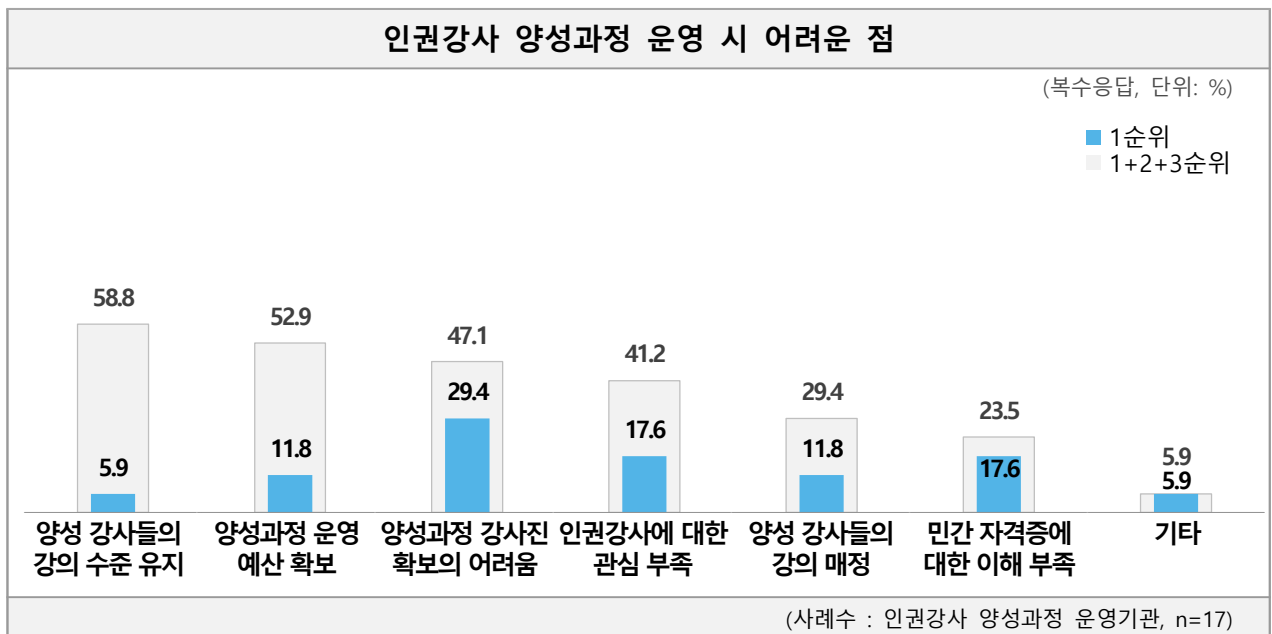
1) 양성과정 운영 시 어려운 점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시 '양성 강사들의 강의 수준 유지', '양성과정 운영 예산 확보', '양성과정 강사진 확보'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2+3순위 응답 기준)

- ▶ 특히,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며, 그 외에 '인권 강사에 대한 관심', '민간 자격증에 대한 이해' 증진에 대한 니즈가 있음.



[심층 인터뷰 결과]

▶ 양성과정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 수강료를 받아 초빙 강사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교육 시간을 늘리는 데 한계
- 자원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 기간 확보 어려움
- 교육 공간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등), 인건비 조달의 어려움

▶ 그리고 양성과정 수료 후 강사 활동 연계에 어려움을 느낌.

- 강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강의 활동 연계의 어려움
- 인권 강의를 연결할 만한 플랫폼이 미비하여 전문 강사 양성이 어려움

▶ 양성과정 강사진 초빙 시 지급 비용.

-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급
- 2~3시간 단위로 강의를 진행하며, 15만 원~50만 원 정도 지급(지방의 경우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기도 함)

“가장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죠.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가장 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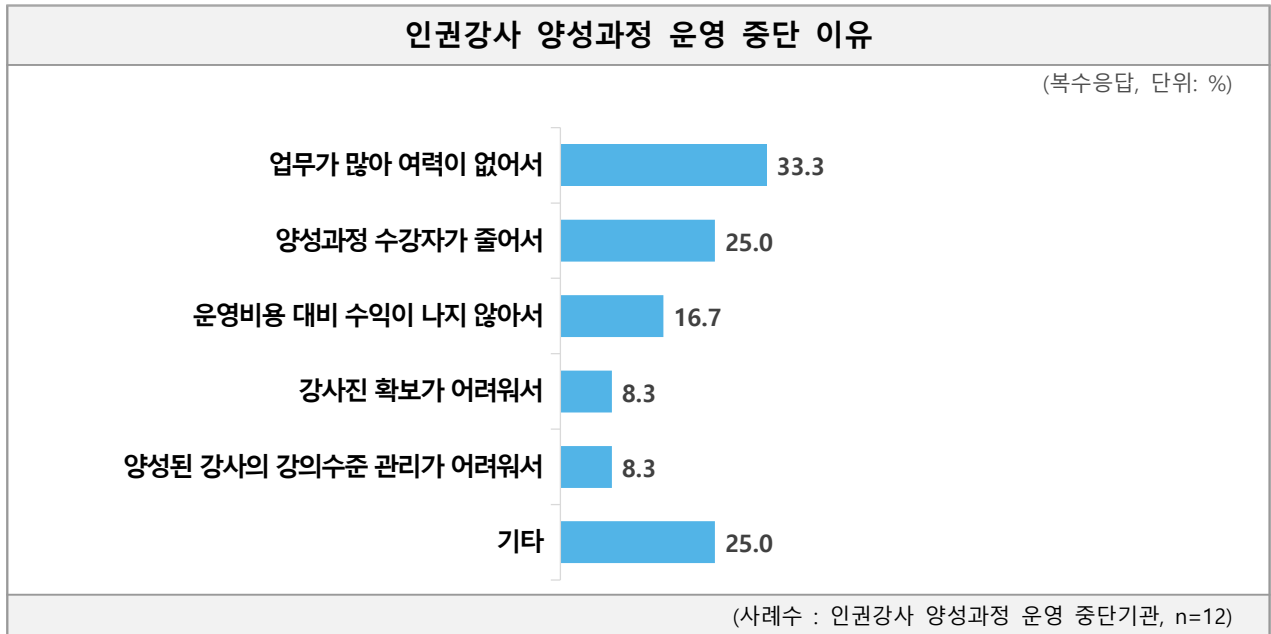
“민간단체에서 100시간 과정을 다하기는 어렵죠. 챗터마다 강사를 초빙해야 하고 강의료도 지불해야 하니까요.”

“교육 후에 실제로 인권교육에 투입되도록 될 수 있게끔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2) 양성과정 운영 중단 및 미운영 이유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중단 이유로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어서'가 높음.
- ▶ 그다음으로 '양성과정 수강자가 줄어서', '운영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서' 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높음.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① 인력, 운영비 등 내부 인프라가 부족해서**
 - 양성과정을 운영할 인력 부족 : 추가적인 업무 수행 여력이 없음, 소규모 기관(1인 상담소), 전문성/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 설립 등
 - 양성과정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
- ▶ **② 새로운 인권강사 양성이 필요하지 않아서**
 -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양성된 강사의 강의 활동 지원이 우선
- ▶ **③ 강사 배출 목적의 양성과정 운영에 부정적이라서 등임.**
 - 지식의 전달보다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
 - 수익 목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은 진행하지만 양성과정을 할 만큼 인력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새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자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위촉하기 보다는 활동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양성과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 조사] 연구

II.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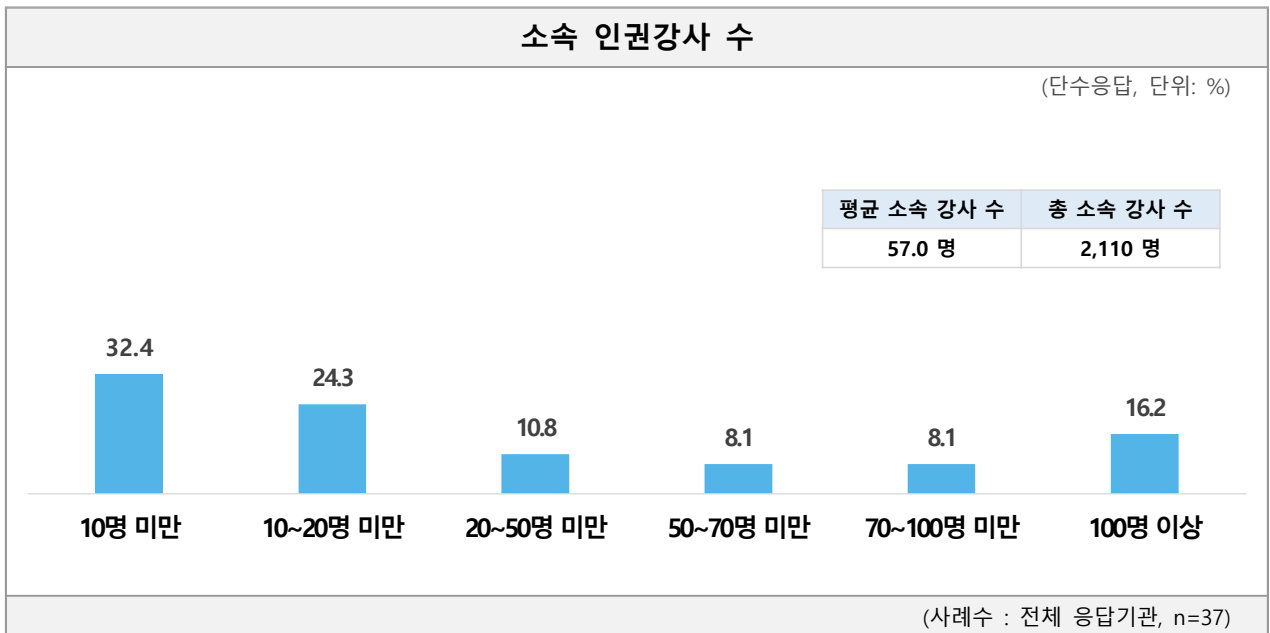
Part 3. 민간분야 인권강사 활동 실태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소속기관 특성

1) 소속 인권강사 수

[온라인 조사 결과]

- ▶ 기관 내 소속된 인권강사 수는 평균 57명으로 1명부터 100명 이상까지 다양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 현재 37개 응답 민간단체의 소속 인권강사는 2,110명임.
- ▶ 그중 소속 강사 수가 10명 미만(32.4%)인 기관과 10~20명 미만(24.3%)의 소규모 기관이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인권강사 소속 형태

[심층 인터뷰 결과]

기관의 규모와 강사의 소속 형태에 따라 기관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 ① 인권강의 활동을 목적으로 강사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로 대다수 기관에 해당하며 3명~100명까지 그 규모가 다양함.

예시) 등록 회원, 위촉 강사진, 소속 강사 등

- ▶ ② 인권과 관련된 주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이 강의 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형태, 10명 미만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임.

- 기관 내에 상근하면서 본 업무 외에 별도로 인권강의 출강

- 직원마다 직무가 다르며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는 소수

- ▶ ③ 5명 미만의 상근직 강사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내외부 강사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 상시 근무하는 소수의 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비상근 인력/네트워크를 연계

- ▶ 그 외 1인 상담소로 연관 협회들과 연대하거나 타 기관에 소속되어 강의 활동을 하기도 함.

“상근인력이라 여건이 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나가요. 자기 일이 많아서 나가기 쉽지는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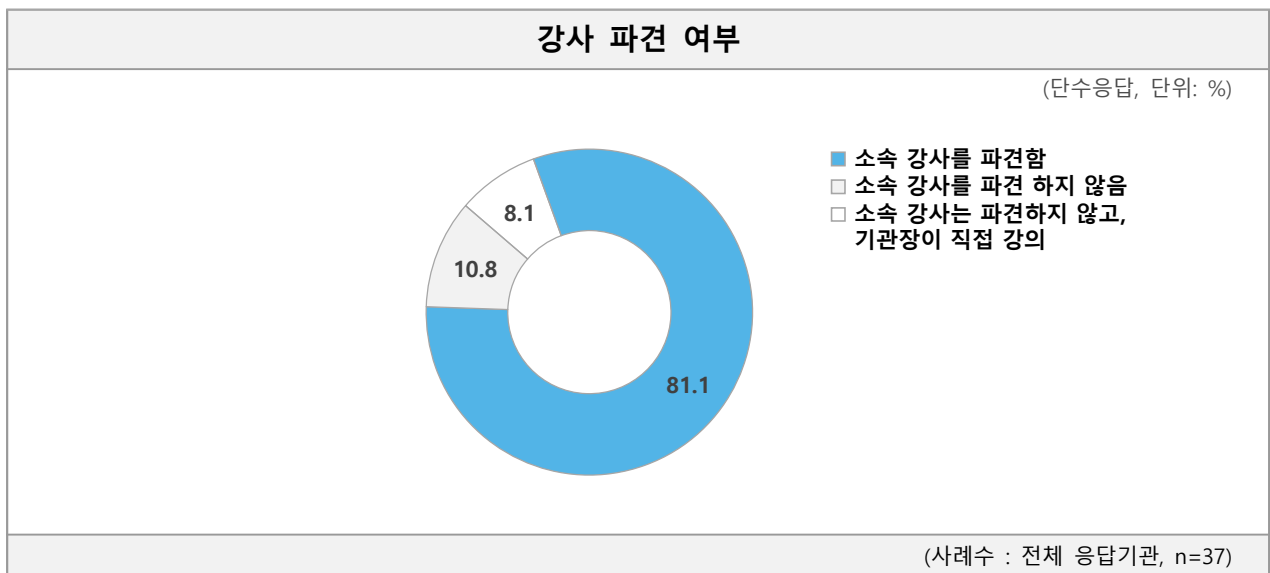
“직원마다 달라서 교육을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사 활동을 하는 분은 일부예요.”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강의를 있을 때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3) 강사 파견 여부

[온라인 조사 결과]

- ▶ 37개 기관 중 81.1%는 인권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강사를 매칭하여 파견하고 있다고 응답.
- ▶ 소속 강사 파견을 하지 않거나(10.8%), 기관장/대표강사가 직접 강의(8.1%)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음.



[심층 인터뷰 결과]

- ▶ 교육활동 목적의 기관이지만 인권 강의를 주력이 아닌 경우, 소속 강사를 파견하지 않고 기관장이 인권 강의를 주로 진행함.
 - 인권 강의를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소속 강사들의 파견 비중 낮음
 - 다수의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권 강의 비중은 매우 낮음
- ▶ 한편 강사진이 기관을 통한 강의 연계에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기관에서 강의를 연계가 중단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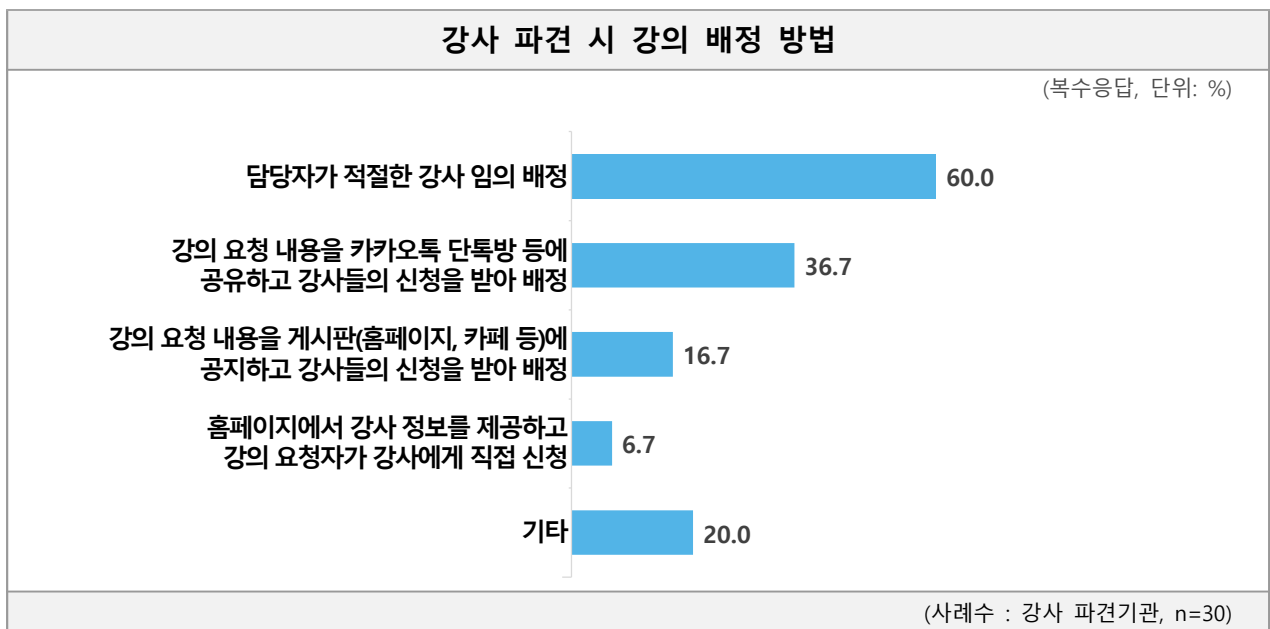
“인권교육 쪽은 주로 제가 하고 있어요. 저희 강사님들 중에는 인권 강의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최근에는 협회 차원에서 연결을 해준 적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이미 단체의 장이나 교수로 활동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면서 응용하고 있어요.”

4) 파견 시 강의 배정 방법

[온라인 조사 결과]

- ▶ 소속 인권강사 파견 시, '담당자가 적절한 강사를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 60.0%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 ▶ 다음으로 '강의 요청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하고 강사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하는 경우가 36.7%로 높음.
- ▶ 게시판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거나(16.7%)나 홈페이지 강사 정보 제공을 통한 직접 신청(6.7%) 방법은 활성화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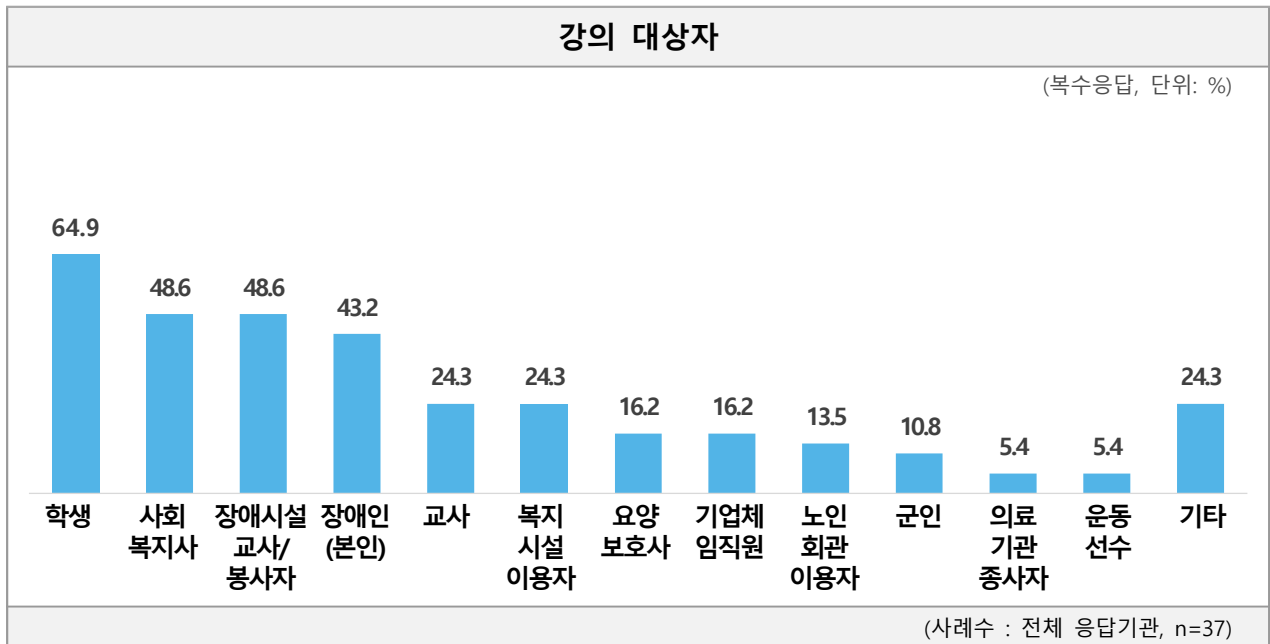


2. 민간분야 인권강사 강의 활동 현황

1) 강의 대상자 및 기관

[온라인 조사 결과]

- ▶ 민간분야 인권강사의 강의 대상자는 학생이 6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그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장애시설 교사/종사자 등 시설 종사자 대상이 각각 48.6%, 장애인 본인이 43.2% 등의 순임.



[심층 인터뷰 결과]

- ▶ 민간분야의 인권강의 대상 기관을 살펴보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적은 편.
- ▶ 학생(아동·청소년)을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위주
 -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교육청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진행
 - 그 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생활 및 이용 시설로 매우 다양
-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 : 사회복지시설 중심
 - 노인 : 노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
 - 장애인 및 부모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등
- ▶ 그 외 기업(공공기관), 경찰 및 군인(군부대) 대상 강의를 일부 진행됨.

“아동은 스스로 권리 주장을 못하니까 주로 교사, 원장님들, 부모님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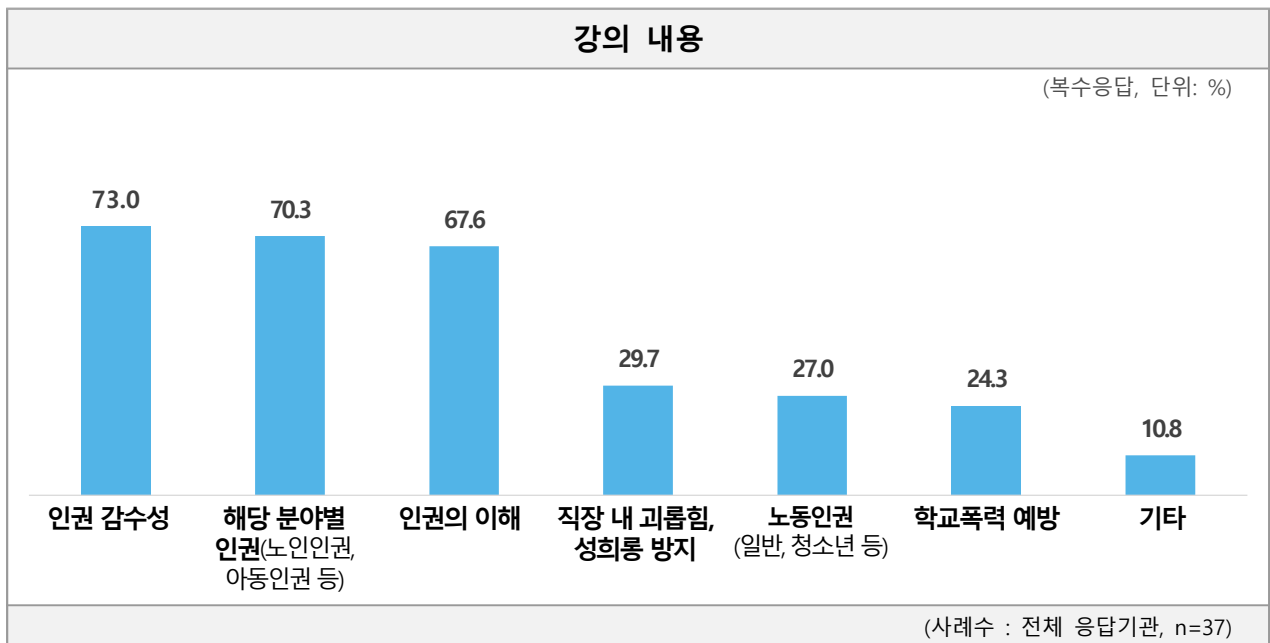
“복지시설 이용자나 종사자 분들에 대한 강의를 많고 최근에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의도 많았어요.”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할 때 인권경영 안에 인권 교육, 인권 감수성 교육 차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2) 강의 내용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인권 감수성, 해당 분야별 인권, 인권의 이해 등의 순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 노동인권, 학교폭력 예방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 강의는 인권 주제만 다루는 강의 외에도 관련 법정 의무교육 등의 내용에 인권을 포함시켜 진행하기도 함.

예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 인권의 내용 포함, 직무교육 내용에 인권사례 포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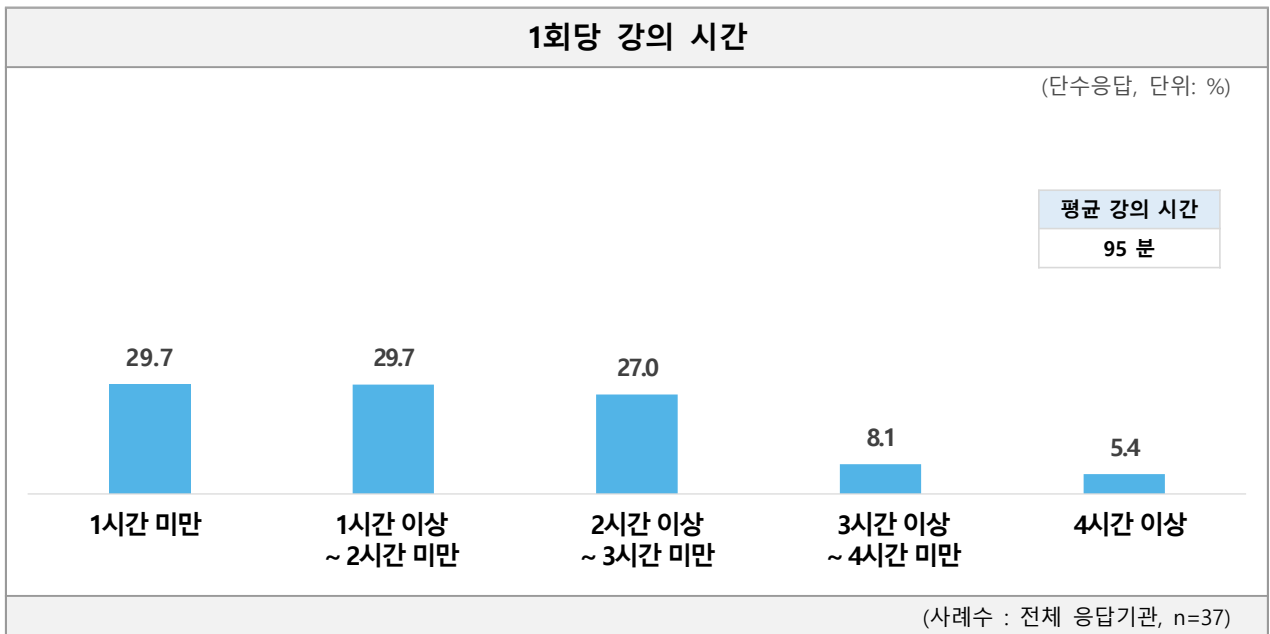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의무이지만 장애인권은 필수가 아니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곁들여서 진행하려고 노력해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인권의 내용을 넣어서 함께하는 식으로 강의한다고 합니다.”

3) 강의 시간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의의 1회 평균 강의 시간은 95분으로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강의가 각 29.7%로 가장 높음.
- ▶ 그 외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강의로도 27.0%로 빈번하게 진행되며, 1회 강의에 3시간 이상 긴 강의를 진행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심층 인터뷰 결과]

▶ 강의 시간은 2시간 진행이 가장 일반적으로 대상자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4시간, 이용자 8시간 의무교육대상 기관으로 상황에 따라 강의 횟수를 나누어 진행
- 요청기관에서 따라서 별도로 시간을 빼기 어려워 1시간 강의를 요청하거나 연강으로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요청하기도 함

▶ 기관에서는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1시간 교육을 지양하거나 거절하기도 함.

- 최소 2시간 교육은 필요하다고 느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시간씩 나누거나 분기별로 1시간씩 쪼개서 진행해요.”

“의뢰하는 기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시간을 다시 만들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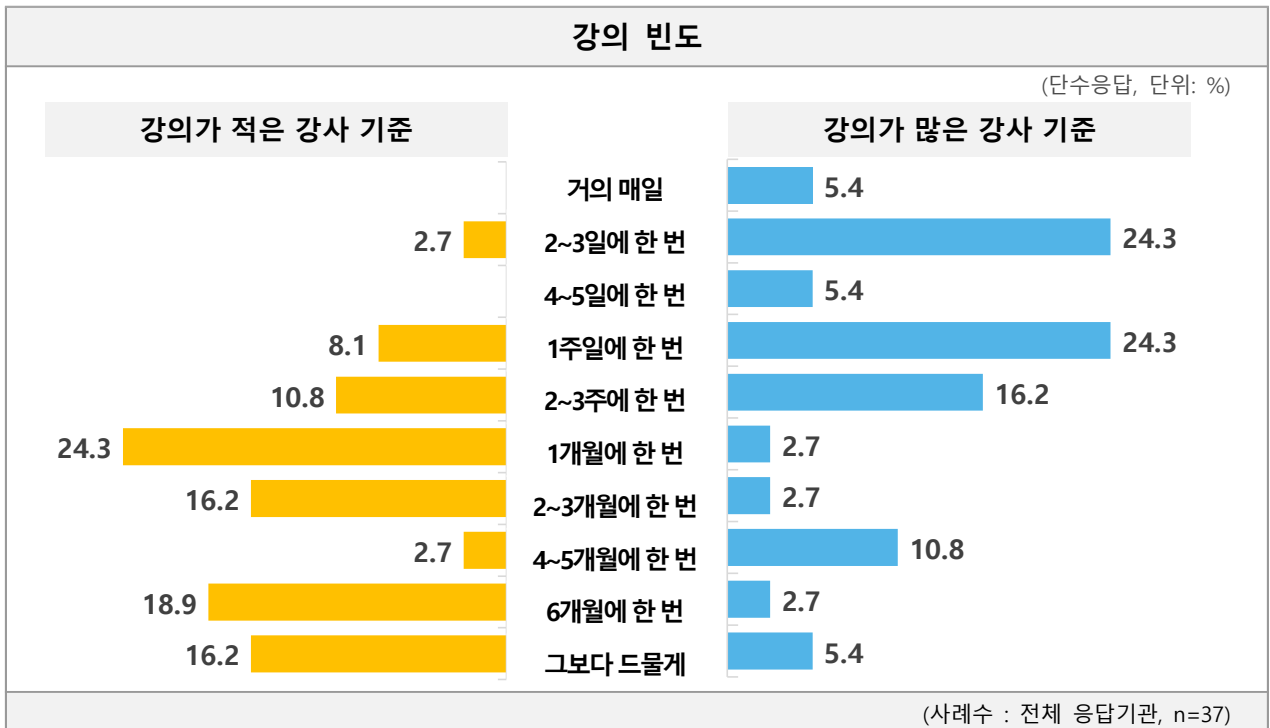
“학교나 기관들은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1시간 강의를 많이 신청하세요.”

“2시간은 되어야 원론 교육을 하고 활동 시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거든요.”

4) 강의 빈도 및 강의 횟수

[온라인 조사 결과]

- ▶ 소속 강사들 간의 강의 빈도는 편차가 큰 편으로, 강의가 적은 강사 기준으로 1개월에 한 번(24.3%)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6개월에 한 번 또는 그보다 드문 경우도 35.1%
- ▶ 강의가 많은 강사 기준으로는 1주일에 한 번과 2~3일에 한 번의 응답률이 각 24.3%로 가장 높음



[심층 인터뷰 결과]

- ▶ 강사별 강의 횟수는 기관의 활성화 정도나 인권강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강사의 경우 거의 매일 혹은 하루에도 2~3건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 ▶ 평균적으로 강의가 많은 강사의 경우 월 8~10회, 중간의 경우 월 4~6회, 적은 경우 월 1~3회 정도.
 - 강의 활동이 매우 적은 경우 연 5회 미만에 그치기도 함
- ▶ 단, 기관에서 연결하는 강의 기준으로 타 기관에 소속된 프리랜서 강사들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강사별로 편차가 있으시죠. 센터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거의 매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편차가 있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월 7~8회도 나가시지만 1년에 한 번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3. 민간분야 인권 강의 비용

1) 강의료 지급기준

[심층 인터뷰 결과]

- ▶ 강의 요청기관 내부적으로 강사료 기준이 정해져 있음.
 - 기관으로 강의 시 인재개발원 강사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음
 -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별도의 강사료 기준을 따름
- ▶ 하지만 많은 경우 정해놓은 강사료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받음.
 - 강의요청 기관 내 책정된 예산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

"시의 인재개발원 강사료를 기준으로 저희 강사님들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소 금액을 얘기는 하지만, 애초에 재능 기부 요청하는 곳도 많아요."

"기관 내부에 강사비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안되니까 급수에 맞게 못 받아요."

2) 1회 강의료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강의 1시간 기준 강의료는 적은 경우 5~8만 원, 중간의 경우 10~15만 원, 많은 경우 20~30만 원 정도임.
 - 기관별, 강사 급수별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음
예시) 1급 25만 원(최초 1시간)+12만 원(초과 매시간), 2급 15만 원+8만 원, 3급 10만 원+5만 원, 4급 8만 원+4만 원, 5급 6만 원+3만 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년 고시 기준)
- ▶ 인권 강의료는 다른 강의들에 비해 강의료 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성범죄 예방 강의, 디지털 스마트폰 강의 등은 1시간 25~30만 원 선
- ▶ 그 외 인권 강의료에 대한 의견 :
 -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의료도 낮은 편
 - 현 강사료 기준은 민간 영역에서 경력을 쌓은 강사에게 불리하게 적용 (퇴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지급기준 대비 낮음)

"강의료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미 정해놓은 강사비가 있고, 복지관이나 개별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급수별 강사비 기준이 있어요."

"어느 파트로 가느냐에 따라 강의비 편차도 있어요. 사회복지 쪽은 보수 수준이 높지 않아요."

3) 강의료 지급 방법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 강의료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예산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의 요청기관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자하는 비중은 낮음.
- ▶ 강의료 지급은 ① 강의 요청기관의 교육비 예산에서 직접 받거나,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예산에서 집행
- ▶ ② 강의 요청기관에는 무료로 진행하고 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을 받아 집행

“복지관 예산을 보면 교육비가 있는데, 거기서 인권교육이 얼마만큼인지는 기관별로 달라요.”

“저희가 운영한 인권교육은 시의 예산으로 강사들에게 집행했던 것이고, 강의를 신청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무료교육입니다.”

4) 적정 강의료

[심층 인터뷰 결과]

- ▶ 1시간 강의 기준 적정 인권 강의료는 최저 15만 원이라는 의견이 다수.
 - 현재 받는 강의료가 5만 원~8만 원인 경우 적정 강의료는 시간당 7만 원~10만 원
- ▶ 또한 강의료 외에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 별도로 필요하다고 느낌.
 - 아동 대상 강의는 활동이 많아 재료비 부담
 - 군부대는 특성상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이동시간과 교통비가 부담
 - 기관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교안 작성, 운영 매뉴얼 작성 시 비용 차등화
- ▶ 적절한 강의료 기준 정립을 위해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기준에 맞게 인상
 - 내부 최저 강의료 기준을 합의 또는 권유, 자원 지원 등

“15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강의에 만나절 하나절 시간 빼는 것은 똑같거든요.”

“2시간에 15만 원 이상은 돼야지 싶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활동이 많고 준비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받으려고 하는데, 무료 강의를 요청하면 조금 곤란하죠.”

5) 강의료 협의 시 어려운 점

[심층 인터뷰 결과]

- ▶ 강의료 협의 시 강의 요청기관의 바닷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큼.
 - 책정된 예산이 없거나, 적거나, 삭감되는 경우 발생
- ▶ 하지만, 이후 강의 요청을 받기 위해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입장임.
 - 무료 강의, 예산에 맞게 강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함

“예산 책정할 때 교육비로 잡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인권교육을 하거나 다른 교육도 하세요.”

“기관평가에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지만 예산 책정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4. 민간분야 인권강사 소속 및 활동 형태

1) 타 기관 중복 활동 여부

[심층 인터뷰 결과]

- ▶ 민간분야의 인권강사는 소수의 상시근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관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① 프리랜서 직업 강사이거나 ② 본업과 인권 강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 ① 직업 강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이거나 다른 기관에 중복 소속되어 활동함.
 - 타 기관의 강사로 등록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행정안전부 등에 강사로 등록
 - 다른 분야의 강의 활동을 병행
- ▶ ② 인권 강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음.
 - 관련 분야에서 근무 : 인권단체 상시 근로자, 대학교수, 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 유관 인권 단체의 활동가

"전업으로 강사를 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인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기 사업들이 있다보니 온전히 저희 기관의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2)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경험 및 지원하지 않는 이유

[심층 인터뷰 결과]

-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촉 경험 강사가 있는 기관은 총 6개로 기관별로 위촉 경험이 있는 강사는 1명 정도임.
-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촉 강사에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별도의 시간을 내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
 - 지방에서 서울까지 물리적 거리의 한계
 - 인권 강의가 주요 업무가 아니라 시간 투자가 어려움
 - 기관 내 심화교육, 교육활동으로 바쁨
- ▶ 위촉 강사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높고 참여의 기회가 적다고 느낌.
 - 위촉 강사의 선발기준이 까다로움
 - 연 1회만 운영하여 참여 기회가 적음
- ▶ 한편, 강의 내용이나 방향성이 기관 혹은 개인의 니즈와 다른 경우도 있음.
 -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된 과정 선호
- ▶ 그 외에 위촉강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강사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예요. 그 교육을 위해서 서울까지 시간을 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인 업무가 바쁘고 강사 활동이 목적이 아니라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양성과정을 수료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선발기준도 까다롭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인권교육 활동이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3) 인권강사 전업 비중 및 겸업 이유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강사 중 인권 강의만 전문으로 하는 전업 비중은 매우 낮음.**
 - 주 수입원인 본업이 따로 있고 인권 강의를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
 - 직업 강사로 인권 이외의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로 나뉨
- ▶ **인권강사 전업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인권 강의만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
 - 확정된 강의 계획 없이 비정기적/개별적 강의 요청

“인권강의만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기는 어려워요. 직원 인건비, 강사료도 나가야 하고요.”

“전업으로 하기에는 안정감이 없으실거예요. 소속은 되어 있지만 강의 계획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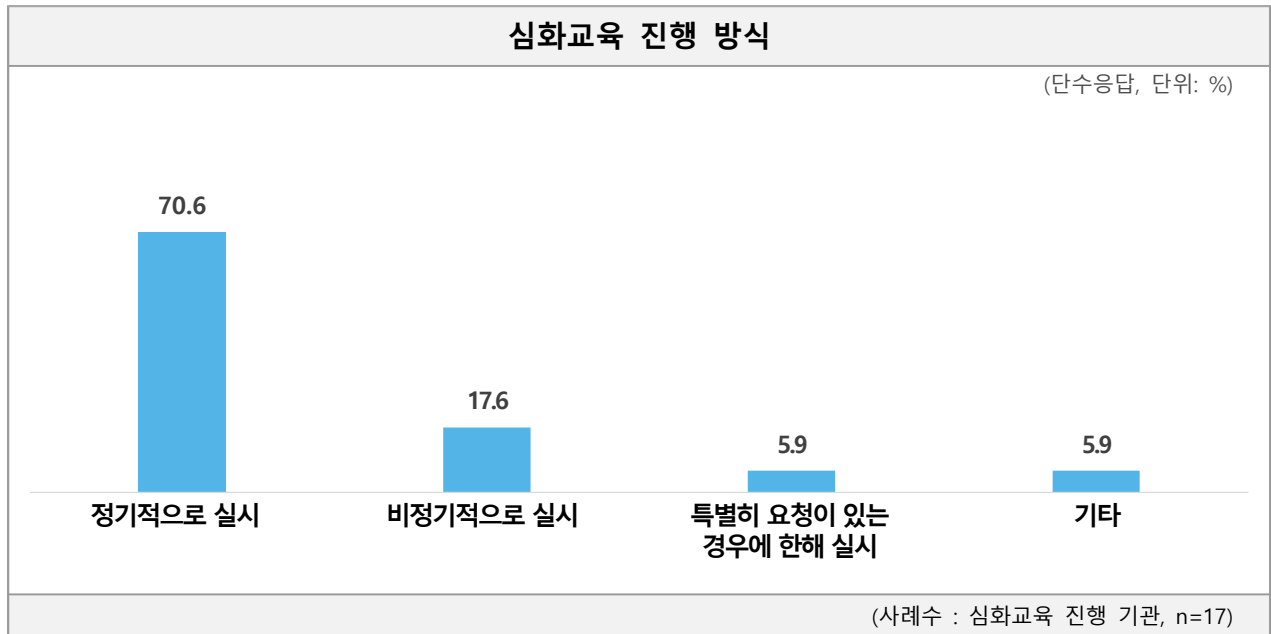
“관련 협회에 전속 강사로 교육을 전담한다면 몰라도 개별 교육 요청을 받아서 전업은 힘들 거예요.”

5. 민간분야 인권강사 소속기관의 활동 지원

1) 심화교육 진행 방식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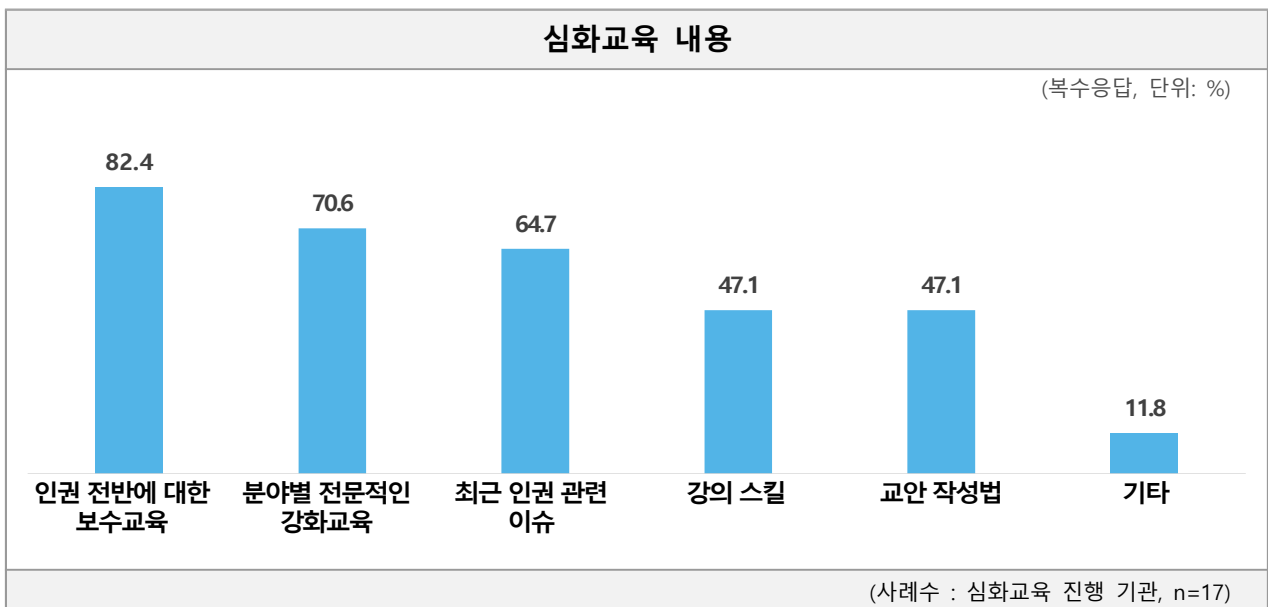
- ▶ 심화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의 70.6%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17.6%로 낮음.



2) 심화교육 내용

[온라인 조사 결과]

- ▶ 심화교육의 주요 내용은 인권 전반에 대한 보수 교육(82.4%), 분야별 전문적인 강화교육(70.6%)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다음으로 최근 인권 관련 이슈(64.7%), 강의스킬 및 교안 작성법(각 47.1%)로 실제 강의 진행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심층 인터뷰 결과]

- ▶ 심화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이수 후 인권강사 활동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관이 다수.
- ▶ 또한 기본교육과정과 별개로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역량강화과정, 스터디, 세미나, 연구모임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음.
예시) 회원대상 매달 역량강화과정 모집, 연 1회 사례연구 모임, 주 1회 스터디 모임, 정기 월례회의, 정기 워크숍, 대상별 교육 진행 등 다양한 형식과 빈도로 진행
- ▶ 대부분의 심화과정은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일부 외부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기도 함.
예시)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이 직접 교육 진행 시 필요한 역량강화

“기초과정 후에 바로 강의로 연결되지 않고 보수과정을 거쳐서 강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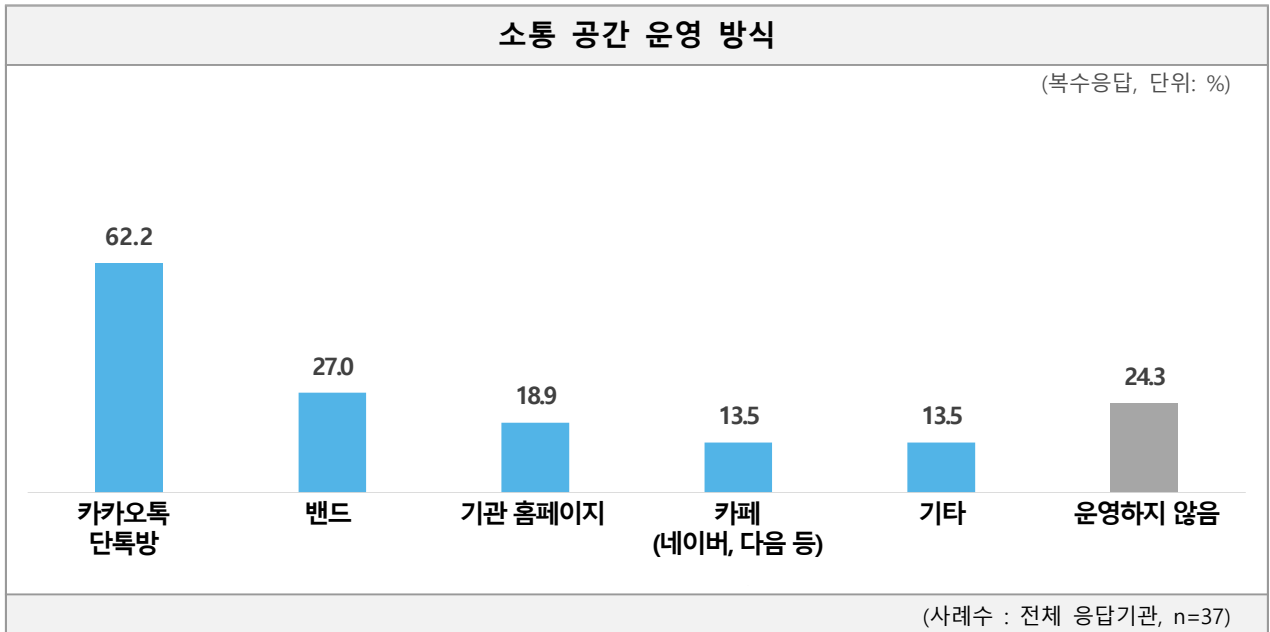
“역량강화과정을 매달 진행해요. 원하시는 분들은 듣고 강제성은 없어요.”

“강사양성과정으로 끝나는데 아니라 매주 스터디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3) 소통 공간 운영방식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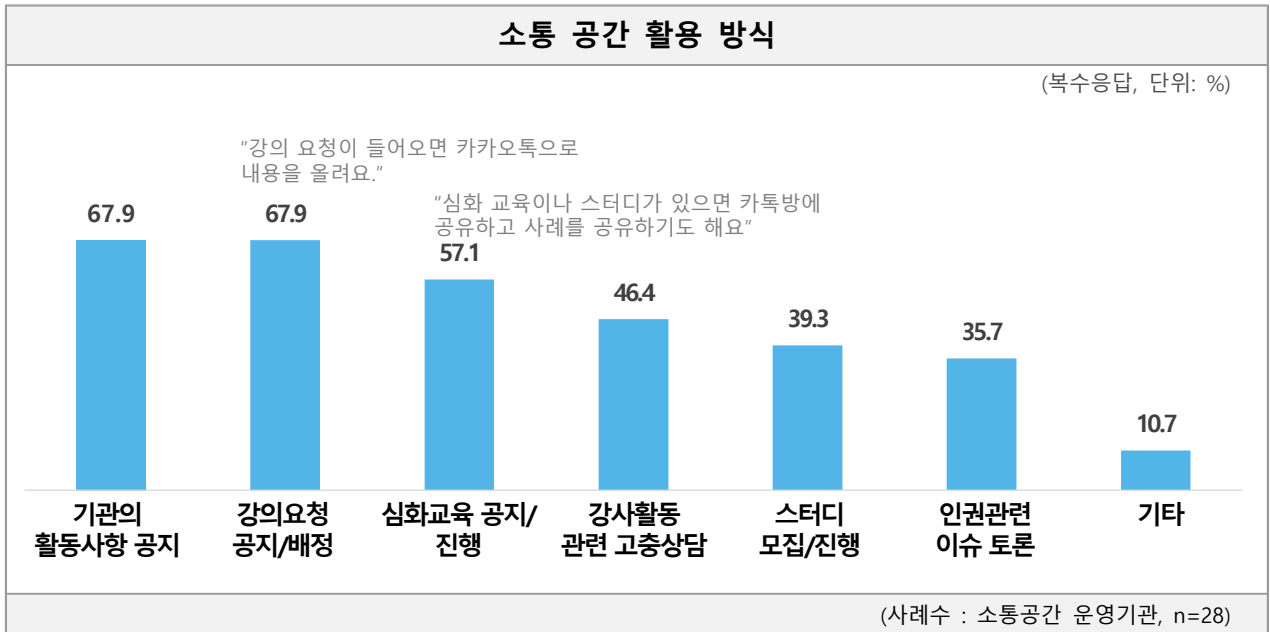
- ▶ 소속 강사들과의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75.7% (미운영 24.3%).
- ▶ 카카오톡 단톡방(62.2%)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널로, 밴드(27.0%)나 기관의 홈페이지(18.9%), 카페(13.5%)를 이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4) 소통 공간 활용 방식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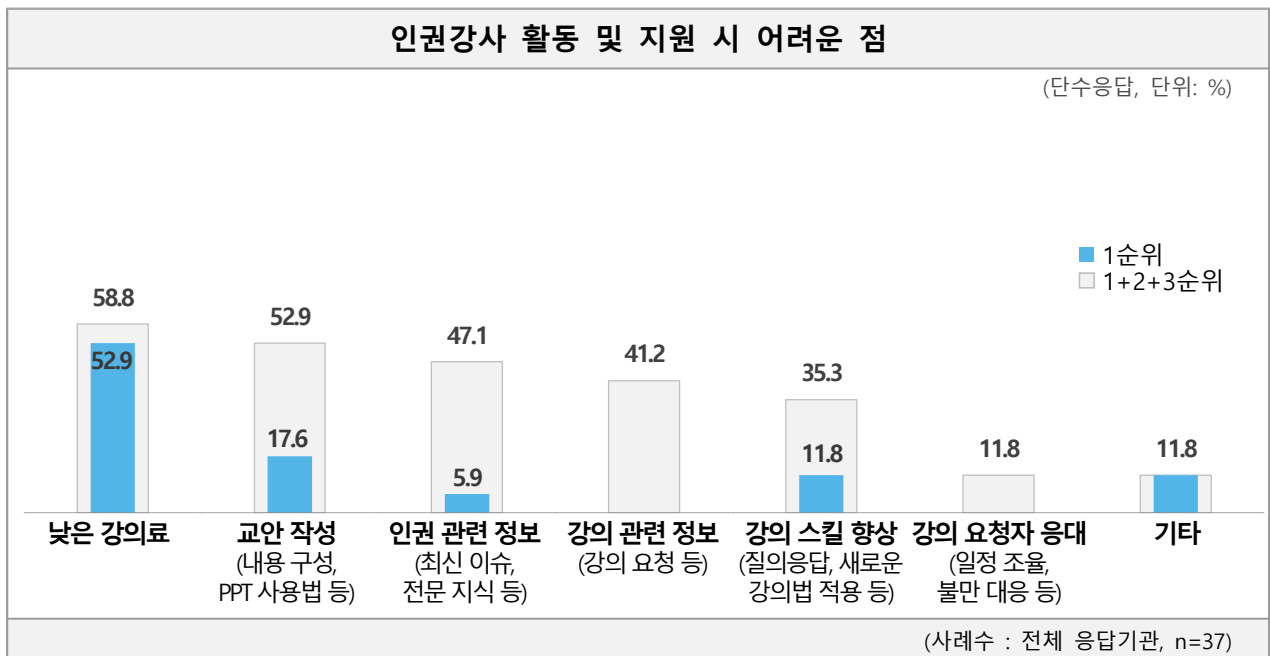
- ▶ 소통 공간은 '기관의 활동 사항을 공지'하거나 '강의요청을 공지 및 진행(각 67.9%)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화교육의 공지 및 진행(57.1%)' 등 기관의 주요 활동을 공유하는 채널로 이용되고 있음.



5) 인권강사 활동 및 지원 시 어려운 점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강사들이 강의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강의료 (52.9%)임.
- ▶ 다음으로 교안 작성(17.6%), 강의 스킬 향상(11.8%) 등 강의 기술 향상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큼.



[심층 인터뷰 결과]

- ▶ 낮은 강의로 외에도 전반적으로 인권강사에 대한 처우가 낮다고 느낌.
 - 외부강사에 대한 편견, 여성 강사에 대한 차별 등
- ▶ 의무교육 기준의 잦은 변동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매해 변경되는 의무교육기준에 따라 교육 수요가 변동되지만, 변경 내용의 파악이 어려움
 - 의무교육 지침이 지역별, 시설별로 다르고 서류, 강사 자격 파악이 어려움
- ▶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우려됨.
 -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되는 경우 편리하지만, 인권 교육의 효과가 낮음
 - 의무화로 인해 교육 수요는 늘었으나 중복 교육, 형식적인 진행의 문제도 생김

“외부 강사지만 저희도 전문가인데 처우가 낮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의무교육 기준이 지역마다 시설마다 달라요. 강의 요청하시는 기관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법정의무교육을 동영상으로 하면 교육의 효과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우려스러워요.”

6.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1)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심층 인터뷰 결과]

- ▶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들의 역량강화, 교육 예산의 확보, 인권강의 수요 증대, 강사자격/강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느낌.**
- ▶ **① 강의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통적인 역량 강화 : 기본 교안 개발, 인권교육 트렌드 등
 - 전문화된 교육 자료 제공(관련부처/기관 등)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대 흐름에 맞는 보수교육 진행 등
- ▶ **② 인권교육에 관련된 정부 예산의 유지 및 확대**
 - 교육비 지원이 가장 확실한 활성화 방안
- ▶ **③ 인권강의 수요 증대를 위한 정책 시행**
 - 의무교육 대상 확대 : 출생신고 시 양육자 인권교육, 교사 인권교육 확대 등
 - 의무교육 내용 확대 : 인권교육의 의무화,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 추가 등
- ▶ **④ 인권교육 관리 체계의 확립**
 - 강의 요청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안내서 배포
 - 강사자격기준에 대한 통합된 가이드라인 마련(기관별/재원별로 다름)
 - 강의료 인상 및 지급기준의 획일화

“기본 교재라든지 인권교육 트렌드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면 강사분들이 활동하실 때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인권교육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가장 확실한 활성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교육,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교육인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인권교육은 아니에요.”

“인권교육 관리 기관을 마련하고 법적 지침이나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면 좋겠어요.”

[온라인 조사 결과]

(N=27)

	사례수(명)	비율(%)
▶ 인권교육 확대	(9)	33.3
인권교육 의무화/의무교육대상 확대	(4)	14.8
인권강의 수요 활성화 필요	(2)	7.4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사업비 지원 필요	(2)	7.4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 확대(예산 확충)	(1)	3.7
▶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민간단체와 협업/소통 필요	(3)	11.1
▶ 교육자료 제공	(3)	11.1
전문화된 교육자료 제공	(1)	3.7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기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 필요	(1)	3.7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인권교육 기본 매뉴얼 제작 배포 필요	(1)	3.7
▶ 강사 역량강화 지원	(2)	7.4
인권강사 양성과정 보수교육시 현 트렌드에 맞는 운영 필요	(1)	3.7
체계적인 커리큘럼, 세부적/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1)	3.7
▶ 강사비 확대 필요	(1)	3.7
▶ 국내 환경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필요	(1)	3.7
▶ 실천 가능한 인권교육 필요	(1)	3.7
▶ 인권교육기관의 일관성 있는 인권교육 필요	(1)	3.7
▶ 국가인권위원회 양성과정 진입장벽을 낮춤	(1)	3.7
▶ 강사 풀을 만들었으면 함	(1)	3.7
▶ 국가인권위원회사이버 교육 시 현직자로 강사 연결/교육	(1)	3.7
▶ 기타	(9)	33.3
▶ 없음	(4)	14.8

2) 국가인권위원회 기대점 및 건의사항

[심층 인터뷰 결과]

- ▶ 앞서 살펴본 인권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강의 활동 지원과 인권강사의 역량강화 방안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강의 활동 지원
: 교안 제작, 교육 콘텐츠 개발(사례집, 영상 콘텐츠 등), 해외 사례, 인권정책 소개, 최신 이슈 등 현장 상황이 반영된 교육자료 개발
 - 역량강화 지원
: 인권강사의 인권감수성 역량강화, 양성과정 운영 빈도 확대, 양성과정 교육 주제의 다양화, 비수기에 교육 진행 등
-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분야 강사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수요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건의함.
 - 지방의 민간단체와 함께 강사 양성과정 진행
 - 관련 기관 간 소통채널 마련: 인권단체 워크숍, 수행기관 간담회 주관 등
 - 인권교육 플랫폼 역할 강화 : 민간교육기관 명단 게시, 인권강사,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강사풀 확보 등
 - 인권교육센터 및 위촉강사제도에 대한 홍보
- ▶ 그 외에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향상
 -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해당 주제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매년 교안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든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부에서 강사 위촉 과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하기가 힘들다면 협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모이거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명단을 수집해서 게시를 해주면 교육을 할 때 찾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홍보를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온라인 조사 결과]

(N=27)

	사례수(명)	비율(%)
▶ 교육자료 제공	(7)	25.9
컨텐츠 및 교육주제 다양화/최신화	(4)	14.8
인권현장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	(1)	3.7
기초 자료 확보	(1)	3.7
매년 최신 교안 개발 필요	(1)	3.7
▶ 강사 역량강화 지원	(4)	14.8
인권강사 전문성/인권감수성역량 향상 필요	(2)	7.4
지역의 인권단체, 기관 등과 연계 양성과정 진행	(1)	3.7
주제별 심화과정 운영	(1)	3.7
▶ 강의 플랫폼 및 네트워킹	(4)	14.8
인권교육 인권기관과 연계 매칭 확대 / 기관 안내	(3)	11.1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성화	(1)	3.7
▶ 위촉제도 활성화	(3)	11.1
위촉강사 진입장벽 낮추었으면 함	(1)	3.7
위촉강사 양성 인원 확대	(1)	3.7
인권강사 활용 확대 필요	(1)	3.7
▶ 교육의 의무화	(2)	7.4
▶ 인권교육의 지속성	(2)	7.4
▶ 교육자료 접근성 확대	(2)	7.4
국가인권위원회 콘텐츠 공동 활용 시 절차 간소화 필요	(1)	3.7
교육체계 개방 필요	(1)	3.7
▶ 기타	(4)	18.5
▶ 없음	(5)	18.5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 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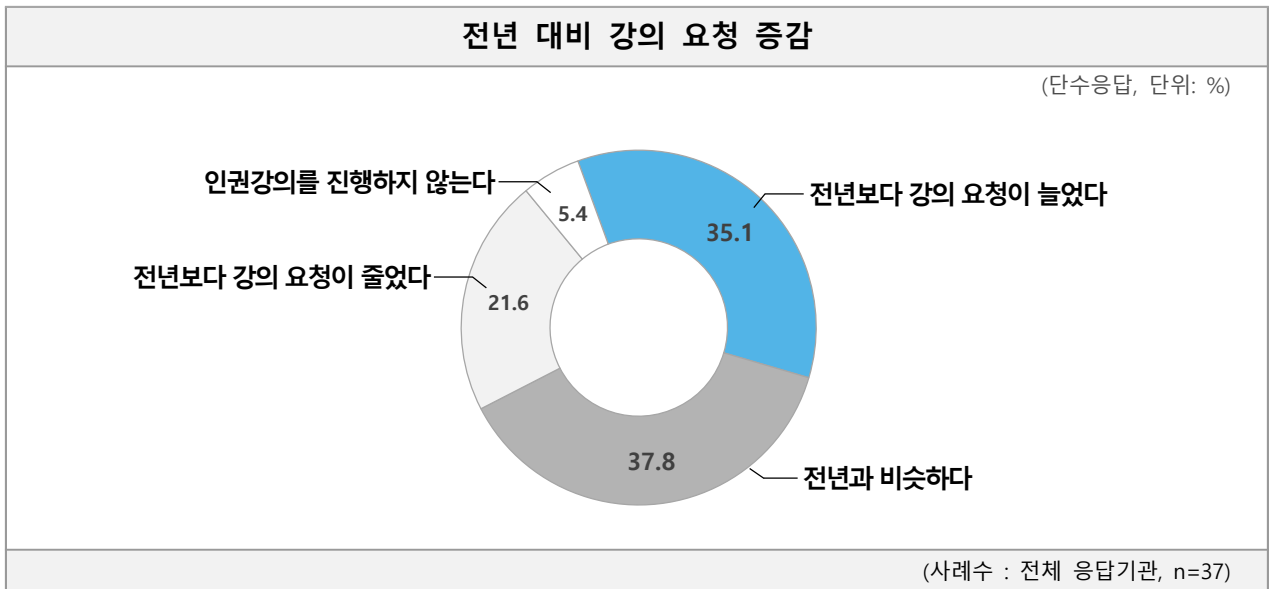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Part 4. 민간분야 인권교육 시장 동향

1. 인권교육 수요 증감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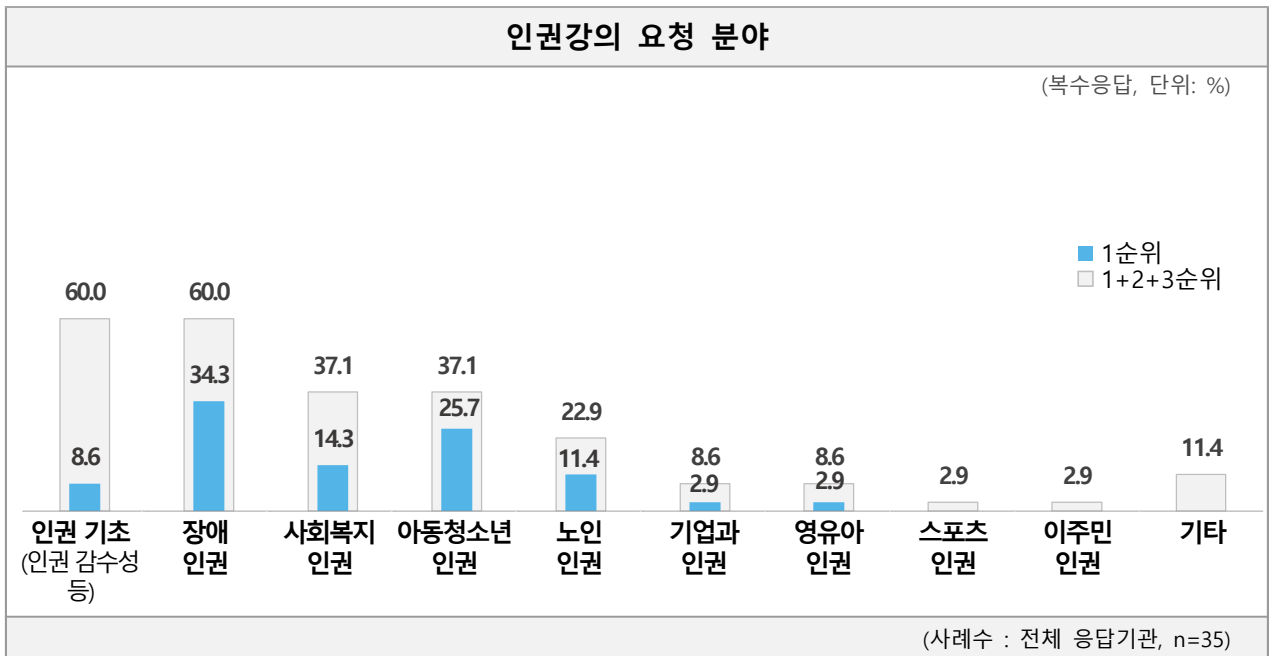
▶ 인권강의 요청은 전년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과 비슷 37.8%, 전년 대비 증가 35.1%, 전년 대비 감소 21.6% 순.



2. 인권강의 요청 분야

[온라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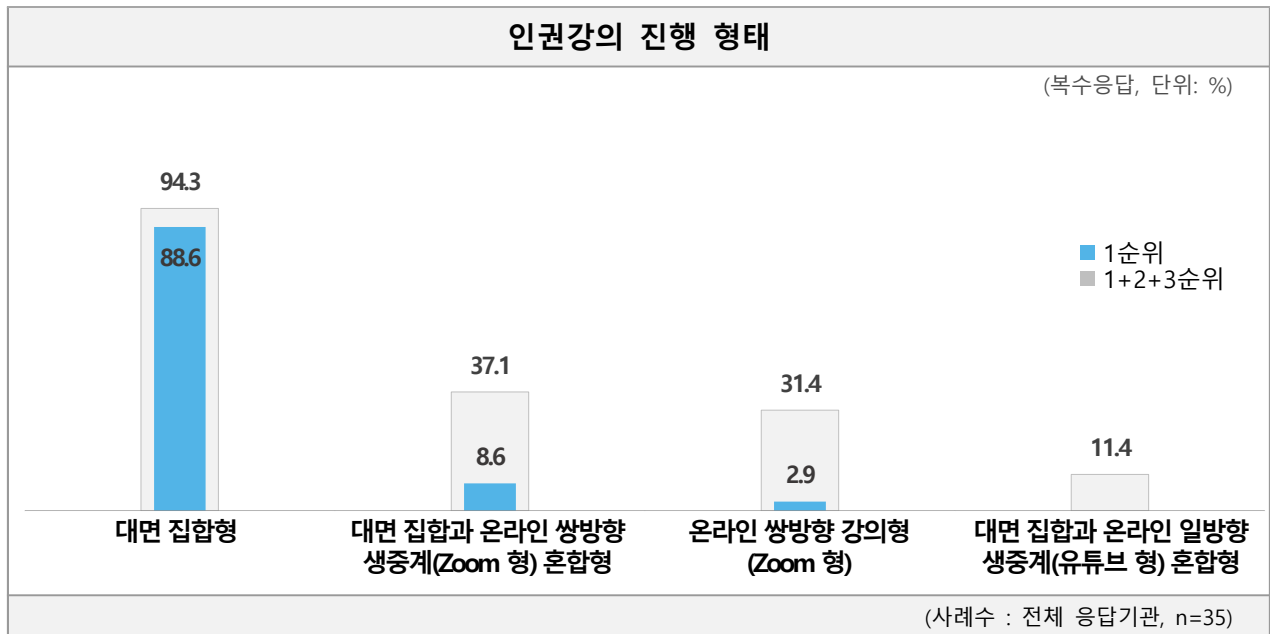
- ▶ 인권강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인권 감수성 등 인권 기초와 장애 인권으로 각각 60.0%.
- ▶ 그 외에 사회복지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노인인권 분야의 순으로 요청이 많음.



3. 인권강의 진행 형태

[온라인 조사 결과]

- ▶ 인권 강의는 대면 집합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94.3%).
- ▶ 그 외 대면 집합+온라인 쌍방향 생중계형과 온라인 쌍방향 강의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응답률은 낮은 편.



[심층 인터뷰 결과]

- ▶ 강의형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론 수업과 토론, 영상물을 활용한 활동형 수업 병행
 - 기관에서 제작한 서적, 인권영화 등을 수업에 활용

“활동형 수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영상물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도 해요.”

“저희는 매년 관련 서적을 제작하는데, 이것으로 초등학생이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와 인권교육을 접목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인권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어요.”

4. 인권교육 Trend 변화

[심층 인터뷰 결과]

- ▶ **법정의무교육 이수 제도화는 인권강의 수요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지금까지 의무교육의 확대, 분야의 세분화로 인권강의 수요가 증가함.**
 - 사회복지시설 기관평가 항목에 포함,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권고 등
 -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간에 변동이 없는 분야의 강의수요는 유지될 전망
- ▶ **최근 포스트 코로나 상황과 대면교육 권고로 인권강사의 활동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권리, 장애인권리, 노동권익 등을 다루는 교육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전문 분야별 강의 보다는 인권 감수성, 인성교육, 인식 교육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노인, 노숙자 대상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서 교육이 늘어났죠.”

“인권교육 의무사항이 있어서 강사들이 활동 기회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의 양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있는 거죠.”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도 인권이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 조사] 연구

Ⅲ. 요약 및 결론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기관 현황

- <인권>과 관련하여 강사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총 118개로 그 중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30개 정도.
 - 강사양성 또는 교육현장 파견은 하지 않고 자격증만 발급하는 기관은 69개.
- <인권 강사> 자격증은 모두 '개인/법인/단체'에서 등록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민간 자격증으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 수는 93개이나 최근 1년 내 응시자가 있는 자격증은 10개에 불과함.

▶ 인권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민간분야의 인권강사 자격증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 인권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한 단순 자격증 형태의 시장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2.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실태

1)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현황

- 민간분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나뉨.
- **위탁운영 양성과정**은 공공기관이나 개별 민간 단체가 위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경우로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어 교육 비용이 무료임.
- **기관 자체적인 양성과정**이 있는 경우는 수강자에게 20~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로, 양성 후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권 강의에 참여할 강사진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다수.
- 양성과정은 매해 정기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공공기관 사업 내용이나 기관 내부의 강사 충원/운용 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더 많은 편.

▶ 민간분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양성과정 또한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 기관 자체적인 양성과정은 수료 후 내부 플랫폼을 통한 강의 활동 연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 내부의 강사 수요와 운용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세부 내용

- **[모집 분야]** 민간분야에서 강사양성이 활발한 분야는 장애인권(52.9%)과 인권 기초(35.5%), 그리고 노인인권과 아동청소년인권(29.4%) 순.
- **[대상자 조건]** 자격요건으로 '인권 분야 활동 경력'과 '인권강의 경험'이 각각 52.9%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며,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는 41.2%임.
- **[교육 시간]** 20시간 미만 29.4%로 가장 높으며, 기관별 교육 시간 차이가 큰 편(평균 35.8시간, 최저 10시간~최고 100시간).
- **[교육 내용]** '인권의 이해'는 모든 과정에 포함됨. 인권교육/인권강사에 대한 이해, 인권 감수성, 침해사례 중심의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 **[수료 기준]** 강의 출석률을 기본으로 강의 시연, 필기시험 등으로 중복 검증.

▶ 현재 민간분야 인권강사는 장애인인권, 인권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수료 후 교육활동의 목적이 강할수록 대상자와 수료 기준이 엄격하고 그에 따른 강사 우수성과 전문성의 편차가 큰 편.

3)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현황

- **[등록 인원]** 주로 10명 내외의 소수 또는 20~30명 단위로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연간 1~2회 정도 양성과정을 운영함.
- **[수료 인원]** 최근 1년간 양성과정을 수료한 누적 인원은 기관당 평균 52.2명으로 양성과정의 수료율이 높은 경우는 60~80%, 낮은 경우 30%.
- **[활동 인원]** 양성과정 수료 후 바로 인권 강의 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선발 기준이 엄격한 편이며, 기본교육과정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강사 활동을 위한 심화과정의 참여가 필수적(수료율 20~30%).
- 기본교육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현업이 따로 있어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강의 활동을 위한 심화과정은 참여율이 자체가 낮음.

▶ 민간분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강사로 남는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일부 기존 활동 강사의 역량강화 또는 활동 범위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도 보임.

4)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관련 니즈

-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시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29.4%)'을 가장 크게 느낌.
- 또한 수강료의 대부분을 강사료로 지급(2~3시간 강의, 15~50만 원)하여 그 외 운영비와 인건비의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성과정 운영을 중단한 이유도,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어서(33.3%)', '수강자 감소(25.0%)', '운영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16.7%)' 등의 순임.
- 그 외에 새로운 인권강사의 양성보다는 양성된 강사의 지원을 우선하기도 함.

- ▶ **기관의 안정적인 양성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양성과정 강사진의 확보** (충분한 강사풀, 내부 강사진 확보 등)와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담당 인력의 배정, 양성과정의 체계화 확보 등)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또한 운영으로 인한 수익성이 낮은 편으로 새로운 강사의 양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만큼 민간 분야를 통한 인권교육 수요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민간분야 인권강사 활동 실태

1) 인권강사 소속 및 활동 형태

- 기관 소속 인권강사 수가 10명 미만인 기관이 3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10~20명 미만(24.3%), 100명 이상(16.2%) 등의 순임.
- 회원이나 위촉 강사로 기관에 소속되어 인권 강의 활동을 지원받는 형태가 대다수이고, 상근직으로 인권 강의를 전담하거나 주 업무 외에 부차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일부.
- 프리랜서 직업 강사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타 기관의 강사로 등록되어 복수의 소속을 가지는 경우로, 인권강사를 겸임하는 경우 인권 관련 분야에서 활동.

- ▶ 민간분야에서 인권강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절반 이상이 2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인권강사는 상근직보다는 회원, 위촉강사, 협력강사 등의 형태로 소속을 가짐.
- ▶ 인권강사는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인권강의 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의 확보가 어려워 인권 이외의 강의를 병행하거나 주 수입원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음.

2) 인권강사 소속기관의 지원 활동

- [강사 파견] 응답 기관의 81.1%는 인권 교육 요청 시 소속 강사를 매칭하여 파견하며, '담당자가 적절하게 임의 배정(60.0%)' 하거나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하고 신청받아 배정(36.7%)' 등의 방법으로 파견함.
- [심화 교육] 인권강사 활동을 위해 필수로 참여하는 과정 외에도, 스터디, 세미나, 연구모임, 역량강화과정 등 다양한 형태로 상시 운영(정기적으로 진행 70.6%)되고 있음. 주로 인권 전반, 분야별 전문 교육, 최신 이슈 등 역량강화 목적의 교육이 주를 이룸.
- [소통 공간] 소속 강사들과의 소통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75.7%), 가장 주로 활용되는 채널은 카카오톡(62.2%)로 기관의 활동 사항, 강의요청, 심화교육의 공지 및 진행 등을 게시하는데 이용.

- ▶ 기관에서 소속 인권강사를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강의 매칭과 심화 교육 진행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심화교육을 통한 강사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음.
- ▶ 카카오톡 채널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소통 공간으로 기관의 주요 활동, 강의요청, 심화교육 등 정보 공유의 목적이 큼.

3) 인권강사 강의 활동 내용

- **[강의 대상]** 민간분야 인권강의 대부분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로 학생,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위주.
- **[강의 내용]** 인권 감수성, 해당 분야별 인권, 인권의 이해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며 '인권교육' 목적의 강의 이외에 직무교육이나 관련 법정 의무교육의 내용에 인권을 포함시켜 진행하기도 함.
- **[강의 시간]** 1회 평균 강의 시간은 95분으로 절반 이상이 2시간 미만 강의.
- **[강의 빈도]** 기관의 활성화 정도나 강사 개인의 역량에 따른 차이가 크며 강의가 많은 경우 월 1~3회, 중간 경우 월 4~6회, 많은 경우 월 8~10회.

- ▶ 민간분야 인권 강의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학생, 교사, 시설 종사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 위주.
- ▶ <인권>이 주제인 강의 외에도 인권을 기본적으로 녹여서 강의를 진행하며 1회 강의 시 약 95분으로, 강사별 강의 빈도의 편차가 큰 편.

4) 인권강사 강의료

- **[강의료 기준]** 요청기관 내부 강사료 기준을 따르지만 예산의 문제로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
- **[1회 강의료]** 1시간 기준 적은 경우 5~8만 원, 중간 경우 10~15만 원, 많은 경우 20~30만 원 수준. 성범죄 예방 강의 등 다른 강의료 대비 낮게 책정됨.
- **[강의료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강의료를 지급하는 비중이 높으며 예산을 받는 주체에 따라 강의 요청기관이 지급하거나 무료 강의로 진행하고 기관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형태.
- **[적정 강의료]** 적절한 인권 강의료는 시간당 15만 원으로 기준의 정립을 위해 기관에서도 최저 강의료 수준의 합의나 강사수당 인상 등의 노력을 기울임.

- ▶ 적절한 인권 강의료는 1시간 최저 15만 원이라는 의견이나 현재 요청기관 내부 기준과 예산의 문제로 1시간 10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도 다수.
- ▶ 이는 강의 요청기관이 교육비 예산을 낮게 책정하여 강사료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큼.
(각 학교, 요양원, 아동센터 등 인권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인권 강의를 위한 예산이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배정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제도적으로 인권강의를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권 강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음)

4. 민간분야 인권교육 시장 동향

1) 인권교육 수요 변화

- 인권강의 요청은 전년 대비 유지 또는 증가(전년과 비슷 37.8%, 전년 대비 증가 35.1%).
- 인권교육 수요 증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제도화'로 의무교육이 확대, 세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 수요가 증가함.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상황과 대면교육의 권고는 인권강사의 활동 기회가 늘어나는 긍정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제도화에 따라 강의 수요가 증가해온 특징을 보이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유지/확대와 더불어 인권강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의무교육 대상, 내용 확대 등) 시행이 필요하다고 느낌.
- ▶ 향후 수요 또한 의무교육 시장 내의 대면 교육 권고에 따른 기회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분야에서 교육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2)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 민간분야 강사양성 기관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촉 경험이 있는 강사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
- 거리/시간적인 한계, 엄격한 선발 기준 등으로 위촉 강사과정 참여에 한계는 느끼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역량강화 및 강의활동 지원에 대한 니즈가 강함.
-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인권교육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강의 질을 향상시키며, 민간 분야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 수요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기대함.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허브로서 인권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며, 강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 제공 등 주요 기관과 협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 조사] 연구

IV. 부록

[부록 1] 온라인 조사 설문지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인권교육 분야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 관 기 관 : 국가인권위원회

수 행 기 관 : (주)디파인앰코(02-3446-5076)

Intro. 최근 인권강의 Trend

* 다음은 귀하께서 소속되신 협회/단체(이하 기관)를 통해 진행하신 **인권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2022년과 비교할 때, 귀하의 기관을 통해 진행한 인권강의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단수응답)

1. 전년보다 강의요청이 늘었다
2. 전년과 비슷하다
3. 전년보다 강의요청이 줄었다
4. 인권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 Part A로 이동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12.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인권강의 요청이 가장 많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많은 순서대로 3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필수, 3개까지 응답)

- | | |
|------------------|----------------|
| 1. 인권감수성 등 인권 기초 | 7. 장애(정신건강) 인권 |
| 2. 기업과 인권 | 8. 이주민 인권 |
| 3. 스포츠 인권 | 9. 영유아 인권 |
| 4. 사회복지 인권 | 10. 아동청소년 인권 |
| 5. 노숙인 인권 | 11. 기타(_____) |
| 6. 노인 인권 | |

13. 귀하의 기관을 통해 올해(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인권강의는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많이 진행된 순서대로 3가지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필수, 3개까지 응답)

1. 대면 집합형
2. 대면 집합과 온라인 일방향 생중계(유튜브 형) 혼합형
3. 대면 집합과 온라인 쌍방향 생중계(Zoom 형) 혼합형
4. 온라인 쌍방향 강의형(Zoom 형)
5. 기타(_____)

PART A.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현황

* 다음은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신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과정’이란,

향후 인권강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사로 활동하기위한 기초 교육, 인권강사로 활동 중인 분들을 위한 보수/심화 교육 모두 해당합니다.

A1. 귀하의 기관에서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단수응답)

1. 현재 운영하고 있다 → A3으로 이동
2. 예전에는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 A2로 이동
3. 운영한 적 없다 → A13으로 이동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응답 후 A13으로 이동

A2. 귀하의 기관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운영을 중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1. 양성과정 수강자가 줄어서
2. 운영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서
3. 강사진 확보가 어려워서
4.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어서
5. 양성된 강사의 강의수준 관리가 어려워서
6. 기타(_____)

A3. 귀하의 기관에서는 **어떤 형태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기본교육과정**(수강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교육, 기본-전문 등의 단계로 구분하기도 함)
2. **심화교육과정**(기관에서 양성된 강사/등록된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량강화교육, 보수 교육 등)
3. 기타(_____)

☞ Programmer: A3에서 1. 기본교육과정에 응답한 경우 아래 설명문 제시 후 A4 질문, 미응답자는 A13으로 이동

* 지금부터는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신 **인권강사 양성과정 중 기본 교육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A4.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명칭(프로그램명)**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예시 - 00시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보기 12번 선택 시 복수응답 불가

A5. 귀하의 기관에서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 |
|------------------|----------------|
| 1. 인권감수성 등 인권 기초 | 7. 장애(정신건강) 인권 |
| 2. 기업과 인권 | 8. 이주민 인권 |
| 3. 스포츠 인권 | 9. 영유아 인권 |
| 4. 사회복지 인권 | 10. 아동청소년 인권 |
| 5. 노숙인 인권 | 11. 기타(_____) |
| 6. 노인 인권 | 12. 분야 구분 없음 |

A6.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모집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 |
|--------------------------|----------------------|
| 1. 자격요건 없음 | 4. 해당 분야에서 재직할 예정인 자 |
| 2. 인권관련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5. 해당 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 |
| 3. 인권강의 경험이 있는 자 | 6. 기타(_____) |

☞ Programmer: Range 1~999 정수만 기입

A7.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교육 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대면, 비대면(Zoom, 온라인 강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단수응답.

총 _____ 시간 / 99.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음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A8.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 |
|--------------------------------|----------------------|
| 1. 인권의 이해 | 7.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방지 |
| 2. 인권 감수성 | 8. 학교폭력 예방 |
| 3. 해당 분야별 인권의 이해(노인인권, 아동인권 등) | 9. 학대/인권 침해 사례 |
| 4. 강의 기술(강의 시연, 코칭 피드백 등) | 10. 인권교육/인권강사에 대한 이해 |
| 5. 교안 작성(PPT 등) | 11. 기타(_____) |
| 6. 인권 관련 법령/제도 | |

A9.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수료증 발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강의 출석률
2. 필기시험 점수
3. 강의시연 평가

- 4. 별도 수료 기준 없이 등록자는 모두 수료증 발급
- 5. 기타(_____)

☞ Programmer: Range 1~999 정수만 기입

A10. 귀하의 기관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최근 1년(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주관식)

최근 1년 수료 인원	()명
--------------------	-------------------------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A11. 귀하의 기관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필수, 3개까지 응답)

- 1. 인권강사에 대한 관심 부족
- 2. 민간 자격증에 대한 이해 부족
- 3. 양성과정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
- 4. 양성과정 운영 예산 확보
- 5. 양성 강사들의 강의 배정
- 6. 양성 강사들의 강의 수준 유지
- 7. 기타(_____)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A12. 귀하의 기관에서 양성한 인권강사들이 강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필수, 3개까지 응답)

- 1. 강의 관련 정보(강의 요청 등)
- 2. 인권 관련 정보(최신 이슈, 전문 지식 등)
- 3. 강의 스킬 향상(질의응답, 새로운 강의법 적용 등)
- 4. 강의 요청자 응대(일정 조율, 불만 대응 등)
- 5. 교안 작성(내용 구성, PPT 사용법 등)
- 6. 잦은 출장
- 7. 낮은 강의료
- 8. 기타(_____)

☞ Programmer: 모두에게 질문, 보기 7번 선택 시 복수응답 불가

A13. 다음 중 귀하의 기관에서는 현재 발급하고 있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기관에서 활동하는 인권강사 혹은 회원(양성과정 수료자, 심화과정 수강자, 기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서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1. 수료증
- 2. 자격증
- 3. 위촉장
- 4. 인권교육 확인증
- 5. 국가 등록 민간자격
- 6. 기타(_____)
- 7. 발급 서류 없음

PART B. 민간분야 양성 인권강사 활동 현황

* 지금부터는 **귀하의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회원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양성된 인권강사(이하 소속 인권강사)의 강의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B1. 귀 기관의 소속 인권강사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 |
|-------------|------------------------------|
| 1. 학생 | 8. 노인회관 이용자 |
| 2. 교사 | 9. 복지시설 이용자(노숙자, 미혼모 보호시설 등) |
| 3. 군인 | 10. 운동선수 |
| 4. 사회복지사 | 11. 장애인(본인) |
| 5. 요양보호사 | 12. 장애시설 교사/봉사자 |
| 6. 의료기관 종사자 | 13. 노숙자 |
| 7. 기업체 임직원 | 14. 기타(_____) |

☞ Programmer: 보기 로테이션(기타 제외)

B2. 귀 기관의 소속 인권강사는 주로 어떤 내용의 인권강의를 진행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인권의 이해
2. 인권 감수성
3. 해당 분야별 인권(노인인권, 아동인권 등)
4. 노동인권(일반, 청소년 등)
5. 학교폭력 예방
6.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방지
7. 기타(_____)

☞ Programmer: Range 1~999 정수만 기입

B3. 귀 기관의 소속 인권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강의는 1회당 몇 분입니까? (단수응답)

1회당 _____ 분

☞ Programmer: 1. 강의가 적은 강사 기준, 2. 강의가 많은 강사 기준 각각에 대해 별도로 제시
2. 강의가 많은 강사 기준의 빈도는 1. 강의가 적은 강사 기준의 빈도와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B4. 귀 기관의 소속 인권강사는 월 평균 몇 회 정도의 인권강의를 진행하십니까?

강의가 적은 강사 기준과 강의가 많은 강사 기준 각각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단수응답)

1. 강의가 적은 강사 기준		2. 강의가 많은 강사 기준	
1. 거의 매일	1. 1개월에 한 번	1. 거의 매일	1. 1개월에 한 번
2. 2~3일에 한 번	2. 2~3개월에 한 번	2. 2~3일에 한 번	2. 2~3개월에 한 번
3. 4~5일에 한 번	3. 4~5개월에 한 번	3. 4~5일에 한 번	3. 4~5개월에 한 번
4. 1주일에 한 번	4. 6개월에 한 번	4. 1주일에 한 번	4. 6개월에 한 번
5. 2~3주에 한 번	5. 그보다 드물게	5. 2~3주에 한 번	5. 그보다 드물게

B5. 귀하의 기관에서는 인권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인권강사와 매칭하여 파견을 하고 계십니까? (단수응답)

1. 네, 소속 강사(회원)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B6으로 이동
2. 아니오, 소속 강사(회원) 파견은 하지 않습니다 →B7로 이동
3. 아니오, 소속 강사(회원) 파견은 하지 않고 기관장(회장, 대표강사 등)이 직접 강의합니다 →B7로 이동

B6. 귀하의 기관에서 소속 인권강사를 파견하시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배정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홈페이지에서 강사 정보를 제공하고 강의 요청자가 강사에게 직접 신청
2. 강의 요청 내용을 게시판(홈페이지, 카페 등)에 공지하고 강사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
3. 강의 요청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 공유하고 강사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
4. 담당자가 적절한 강사 임의 배정
5. 기타(_____)

☞ Programmer: 보기 6번 선택 시 복수응답 불가

B7. 귀하의 기관에서는 소속 인권강사들과 소통을 위한 공간(단톡방, 카페, 밴드 등)을 운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카카오톡 단톡방
2. 카페(네이버, 다음 등)
3. 밴드
4. 기관 홈페이지
5. 기타(_____)
6. 운영하지 않음 →B9로 이동

B8. 귀하의 기관에서는 소통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기관의 활동사항 공지
2. 강사활동 관련 고충상담
3. 강의요청 공지/배정
4. 스터디 모집/진행
5. 인권관련 이슈 토론
6. 심화교육 공지/진행
7. 기타(_____)

☞ Programmer: A3에서 보기 2. 심화교육 선택한 응답자에게 질문

B9. 귀하의 기관에서는 심화교육(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 등)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단수응답)

1. 정기적으로 실시
2. 비정기적으로 실시
3. 특별히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
4. 기타(_____)

☞ Programmer: A3에서 보기 2. 심화교육 선택한 응답자에게 질문

B10. 귀하의 기관에서는 어떤 내용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강의 스킬
2. 교안 작성법
3. 최근 인권 관련 이슈

- 4. 인권 전반에 대한 보수교육
- 5. 분야별 전문적인 강화교육
- 6. 기타(_____)

B11. 귀하께서는 인권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주관식)

B12. 귀하께서는 효율적인 인권교육의 시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대하시는 역할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주관식)

PART D. 자료 분류용 질문

* **지금부터는 자료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통계적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Programmer: Range 1954년~2023년

D1. 귀하께서 소속되신 기관의 설립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도

☞ Programmer: Range 1~9999 정수만 기입

D2. 귀하의 기관에 소속되신 회원(강사)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D3. 귀하의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지부/지회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 | |
|-------|----------|----------|
| 1. 서울 | 7. 부산 | 13. 충청남도 |
| 2. 인천 | 8. 세종시 | 14. 전라북도 |
| 3. 대전 | 9. 제주도 | 15. 전라남도 |
| 4. 대구 | 10. 강원도 | 16. 경상북도 |
| 5. 광주 | 11. 경기도 | 17. 경상남도 |
| 6. 울산 | 12. 충청북도 | |

D4. 귀하께서는 현재 소속되신 기관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단수응답)

- | | |
|----------------|-----------------|
| 1. 1년 미만 | 4. 5년 이상~10년 미만 |
| 2. 1년 이상~3년 미만 | 5. 10년 이상 |
| 3. 3년 이상~5년 미만 | |

[부록 2] 심층 인터뷰 조사 질문지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실태 조사_사후 인터뷰 질문지

Part 0. Warming-up(3분)

- 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 전문 기관인 (주) 디파인앤코 000입니다.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인권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향후 인권강의 시장의 현황 및 니즈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여러 기관에서 인권강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응답하셨던 설문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이번에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에 정답은 없으며 평소 생각하셨던 대로 000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뷰 내용을 제가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녹취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진행하는 동안 핸드폰은 무음으로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Part 1. 인권교육 시장 전반 현황 파악

- 000님께서 계신 기관이 운영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기관이 설립된 계기/목적이 있으시다면?(기관을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만)
- 귀 기관에서 주력하고 있는 인권 강의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최근 인권강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000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인권교육 시장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침체가 지속,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등)
- 인권강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 있다고 보시나요?
향후 인권 강의가 늘어 날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야의 강의를 늘어나고/ 어떤 분야는 줄어 들 것 같나요?

Part 2. 인권강사 양성과정 현황

※ 인권과 관련된 많은 단체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시고 계시지만, 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권강의 시장이 활발해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기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귀 기관에서는 양성과정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모집하시나요?
 - 강사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은 주로 누가 하나요?
 - 강사과정 수강생 교육을 위한 강의(교수)는 어떻게 모집하고 계신가요?
- 1년 기준으로 볼 때, 인권강사 양성 과정은 몇 번 모집/운영 하시나요?
-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필하여 모집하시는지
(예: 자기계발, 제2 인생 준비, 수입, 강의 연결 에 대한 안내 등)
 - 한번 모집할 때 양성과정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 양성 과정 수료 후 강의 활동 연계에 대해 수강자들에게 어떻게 안내 하시나요?
- 귀 기관에 양성과정에 등록하시는 경우 수료를 하는 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이중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 강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Part 3. 인권강의 활동 현황

- 귀 기관에 소속된 인권 강사는 몇 명인가요?
 - 그 중 인권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 본 기관에 소속된 인권강사 중 타 기관(인권강사로 활동하기 위한)에 소속되신 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 이중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 경험을 받으신 분들도 있나요?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에 지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 인권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소속된 인권 강사들은 1년 기준 **몇 번의 강의 활동**을 하나요?
(강의 활동이 적은 사람 기준, 많은 사람 기준, 평균 3개로 질문)
- 주로 **어디로 강의를** 나가시나요?
(기관별로 횟수 질문, 답변 어려울 경우, 기관별 비중 파악)
- 1회 강의를 나가실 때 **강의료는 얼마나** 받으시나요?
- 이런 강의료에 대해 강사 분들은 만족하시는지?
 1시간 기준으로 볼 때 강의료는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 강의료를 강의 요청 기관과 협의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 **강의 기관별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 1회 강의료를 고려했을 때, 인권 강사분들의 **월평균 강의료 수입**은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 강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강사활동이 전업인 경우가 몇 %** 정도 되나요?
- 인권강의 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인권강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Part 4. 마무리

- 추가 질문 및 마무리
-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분야 인권강사 양성 및 현황 실태 조사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일
2023. 12.

조사기관
(주)디파인앤코

ISBN 978-89-6114-929-7 95330